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2009. 9

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책임자: 홍원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윤석상(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수행한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9. 30

연구 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 책임자 : 홍원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여 연구원 :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윤석상(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목 차

요약문	5
제 1 장 들어가는 말	17
제 1 절 동질성과 이질성의 공존	17
제 2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제정치	19
제 2 장 네트워크 사회와 글로벌 공공영역	22
제 1 절 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인간조건의 변화	22
1. 시간적 차원의 융합	22
2. 공간적 차원의 융합	24
3. 행위 차원의 융합	25
제 2 절 사이버스페이스와 공공영역: 정치참여의 가능성 증대	26
1. 전통적 공공영역과 정치적 삶	27
2. 가상적 공공영역의 형성과 정치적 삶	29
제 3 절 글로벌 네트워크화와 공공영역	30
1. 글로벌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국가	31
2. 글로벌 공공영역: 소통·거버넌스·행위자 측면	33
3. 글로벌 공공영역과 공공외교	35
제 3 장 네트워크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의 변용	37
제 1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커뮤니케이션	37
1. 귀속의 단편화와 혼종성(混種性)	37
2. 배타성의 증대와 통합의 저하	41
제 2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제관계의 특성	46

1. 주체의 다양성과 중층적 관계의 심화: 지역성의 재구성	46
2. 국제관계의 링크(link)화	48
제 3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가치정치 일반화	53
1. 정치적 주체 형성으로서의 문화	53
2. 소통과 패권창성 수단으로서의 문화	56
제 4 장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59
제 1 절 권력관계의 변화와 사이버 액티비즘	60
1. 프로슈머와 롱테일: 집단지성과 집단협동	60
2. 정치, 매스미디어, 디지털 컨버전스	64
3. 네트워킹의 문화논리와 네트워크 아미(network army)	66
제 2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가 역할	69
1.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가 개념의 변화	70
2. 네트워크 정체성과 초국적 연대	71
3. 글로벌 사회운동의 확대와 네트워크 시대 세계정치질서	74
제 3 절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공외교	77
1. 네트워크 사회와 공공외교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78
2. 유유상종과 상전이	80
3.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공외교	83
제 5 장 결 론	86
참고문헌	92

표 목 차

〈표 4-1〉 네트워크 시대 정치질서의 특징	77
〈표 4-2〉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한 공공과 외교의 대비적 정향의 통합	84

그 림 목 차

[그림 3-1] 커뮤니케이션 다양화와 탈공간화	38
[그림 3-2] 네트워크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41
[그림 3-3] 내셔널리즘과 국민통합 구조	44
[그림 3-4] 국제관계의 다층적 구조	47
[그림 3-5] 네트워크 유형	50
[그림 3-6] Random network와 Scale free network	51
[그림 4-1] 세계정치 무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85

요 약 문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네트워크 사회의 확산과 세계화의 심화는 세계정치의 무대에 있어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상호동조와 차별화라는 이중적 모습을 표출하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계는 오래도록 존재해 왔지만,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연계의 양상은 기존에 관찰되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노정한다. 본 연구는 정보화·세계화의 지배하에 있는 네트워크 사회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상호작용을 수렴과 차별화의 동학이라는 시각을 갖고 고찰함과 동시에, 이러한 무대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공외교를 고찰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연구 주요 내용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1절 동질성과 이질성의 공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는 집단의 분화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들 사이의 새로운 결합 및 재구성 등 유동적이고 이질적인 인간관계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망은 현실적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디지털 융합 환경의 진전으로 그러한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관계망 형성의 매개수단 및 형식의 변화는 사회영역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영역, 국제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2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제정치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는 일정 영역의 존재자만이 그 존재성을 현실화한 단계에서 층위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행위자들의 존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슈(issue)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컨버전스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 전지구적 목표(혹은 목적)가 하나로 수렴되는 ‘정치의 컨버전스’를 들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의제를 조절하는 지력(intellectual power)을 가진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것이 디지털로 수렴한다(everything is converging on digital)’라고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보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참여로 인한 ‘정치의 수렴’(convergence of politics) 현상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제2장 네트워크 사회와 글로벌 공공영역

– 제1절 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인간조건의 변화

1. 시간적 차원의 융합

디지털 융합 시대 이전 인간의 삶을 조건짓는 시간적 요소는 시간의 지속적 경과와 연계되는 ‘계기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계기성은 시간의 지속적 경과와 연계된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의 시대는 과거·현재·미래의 동시적 존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시간의 ‘동시성’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2. 공간적 차원의 융합

인간의 삶은 사적 영역, 사회영역, 공공영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에 의한 네트워크 사회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달리 표현하면 전통적 공간 개념의 제약성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개인이 현재 어떠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융합된 과학기술의 덕택에 세 가지 문제를 동일한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은 이질적 공간의 동시적 공존을 의미한다.

3. 행위자 차원의 융합

디지털 컨버전스는 행위자들의 관계인 인간관계의 결합 양식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 계급 내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이 강조되었지만, 디지털 융합의 시대에는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각 계급의 구성원들이 소통과 유대를 통해 새로운 쟁점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사이버스페이스와 공공영역: 정치참여의 가능성 증대

1. 전통적 공공영역과 정치적 삶

공공영역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영역이며, 달리 표현하면 공적인 의견의 소통적 형성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보와 견해를 소통하는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공영역을 가능케 하는 주요 원리는 다원성이다. 사이버공간의 확대는 가상적 공공영역의 증대를 가져오고 가상적 공공영역에서 네티즌들은 공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견해를 자유롭게 제시하기도 하고, 공통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 가상적 공공영역의 형성과 정치적 삶

사이버스페이스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상공간은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는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개인과 공동체라는 전통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적 만남의 공간은 공공영역과 민주주의의 재활성화를 제공하고 있다.

— 제3절 글로벌 네트워크화와 공공영역

1. 글로벌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국가

영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체계가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은 과

거에 비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민사회가 새로운 정치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주권과 책임의 공유, 거버넌스 절차의 유연성,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들 속에서 네트워크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 글로벌 공공영역: 소통 · 거버넌스 · 행위자 측면

글로벌 시대 인간의 삶이 국가라는 영토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듯이, 인류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활동영역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출현과 글로벌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듯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은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공공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영역과 공공외교

전통적으로 외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 외교는 정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흔히 공공외교를 국가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대외적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는 지속가능한 세계질서의 실현을 위한 공공영역의 형성을 국내와 국제의 무대 모두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확산과 디지털 컨버전스의 만남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 제3장 네트워크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의 변용

— 제1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커뮤니케이션

1. 귀속의 단편화와 혼종성(混種性)

디지털 컨버전스에 의한 네트워크 사회의 공간 변화, 즉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동시적 변화는 개인, 국가, 초국적(transnational) 행위자들에 의해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상호동조와 차별화라는 이중적 모습을 표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확산은 참여의 확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불투명화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원적인 방향(orthogenetic)이 아니라 복수의 방향(heterogenetic)으로 전개됨으로써, 집단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단편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차원에서 재강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가 서로 교차하는 혼종성(hybrid)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2. 배타성의 증대와 통합의 저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귀속의 단편화와 혼종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글로벌리즘에 대한 절대적·단편적 이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타국과의 접촉이 오히려 자신이 귀속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귀속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커뮤니티에 대한 배타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제2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제관계의 특성

1. 주체의 다양성과 중층적 관계의 심화: 지역성의 재구성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은 물리적 유동성뿐만 아니라 가치의 파급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성의 변형을 촉진한다. 그러나 변형이라는 것이 지역 세계로의 침투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신속하게 와해시킴으로써 보편화를 촉진하는 측면과 지역적 특성을 보존시키는 동시에 그 나름의 자생적 토대 위에서 다원화를 촉진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관계의 링크(link)화

디지털 컨버전스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의 진화는 국제정치에 있어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정보화 국면에서는 타자를 설득하고 유도하는 지력(intellectual power)이 힘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지력이 권력의 원천인 정보화시대에 있어 국제관계는 타자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국제정치는 소수의 국가를 클러스터로 하는 네트워크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을 클러스터로 하는 ‘네트워크 진영 간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권력분포(distribution of power)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것

으로 경합의 특징이 물리적 실체를 점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위한 ‘비전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 제3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가치정치의 일반화

1. 정치적 주체 형성으로서의 문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뿐만 아니라 발신의 확장으로 인한 문화와 가치의 다원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물질적 권력관계를 강조하는 ‘하드파워(hard power)’가 아니라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역할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권력은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이라기보다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치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가 주요 갈등요인이 되고, 이 점은 다양성이 강화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존재와 가치부여를 하는 수단으로서 위신(prestige)과 관련된 가치에 더욱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 소통과 패권창성 수단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으로 점철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상호 소통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통이라는 측면은 호혜와 교환이라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만, 누가 소통을 통제하느냐와 관련해 권력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경제적 삶의 향상과 같은 물질적 욕망 못지않게 자아실현, 자유, 양성평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탈물질적 가치의 정치’(politics of post-materialist value)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탈물질적 가치인 문화와 가치의 확산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 제4장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 제1절 권력관계의 변화와 사이버 액티비즘

1. 프로슈머와 롱테일: 집단지성과 집단협동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사회적 공론의 영역에 있어서의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으로 사회적 열위자, 사회적 취향에 있어 변방으로 밀려났던 이들에게 새롭게 뭉칠 수 있는 공간과 행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는 “대규모 집단협동 mass collaboration”과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의 출현을 가능케 했으며,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컨버전스의 등장은 지식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변화시켰다. 네트워크상에서의 협동은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는 바, 이러한 협동이 지식작업에 적용될 때 집단 지성의 등장을 가져온다. 결국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는 자신의 일상적 관심사나 이익을 중심으로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문제해결 또는 대중설득을 도모하는 집합행위, 이른바 ‘사이버 행동주의 cyber activism’의 부상을 특징으로 한다.

2. 정치, 매스미디어, 디지털 컨버전스

기존의 미디어는 시민과 정치지도자와의 관계에서 하향정치를 재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웹 2.0시대의 도래와 쌍방향성의 도입은 이와 같은 일방적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며, 디지털 컨버전스는 일방성이 아닌 쌍방향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자원의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다방면으로 뻗치는 개별관계를 기초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잠재력 때문이다.

3. 네트워크의 문화논리와 네트워크 아미(network army)

지금까지 시민들은 인터넷을 정치운동과 프로그램을 위한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는 해도 정치과정을 좀 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정보 흐름의 과정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의 정치참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저향정치, 직접투표, 여론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방법의 사용 증대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와 같은 양 입장을 대척점에서 우리는 네트워크 아미(network army)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아미는 누구의 지시도 없고, 어떠한 대척상대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역동성으로 작동함으로써 집단지성과 집단협동의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려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행위자와 정치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 제2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가 역할

1.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가 개념의 변화

비물질적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초국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영토적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국민·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모습이 네트워크라는 좀 더 확장된 사회적 공간 속으로 스며들면서 재조정되고 있다. 재조정된 국가는 근대 이래 유지해 왔던 절대적 지배자의 위치에서 내려와 네트워크 속에서의 여러 행위자들 중의 하나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2. 네트워크정체성과 초국적 연대

근대적 국민국가의 역할 조정과 전지구화는 지역의 사회운동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확장시키고 전세계의 사회운동조직과 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초국적 공론장을 형성시킨다. 초국적 공론장의 형성은 역으로 지역·국가 내의 사회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지역 정부와 국가에 대해 유용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국내·지역의 쟁점을 국제화시키거나 국제적인 관심사나 이슈를 국내로 수용하여 운동차원에서 이슈화시켜 지역과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글로벌 사회운동의 확대와 네트워크 시대 세계정치질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전통적 사회운동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추구했으나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일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변화를 주창하는 NGO 중심의 네트워크(NGO Advocacy Network) 형태를 띠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의 무대 안에 머물러 있었고, 지리적·정치적 경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혁명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회운동은 다양한 운동 네트워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유연하게 조직함으로써 동원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 제3절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공외교

1. 네트워크 사회와 공공외교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전통적 의미의 공공외교는 자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대방 국가의 내부 구성원을 향한 매력의 전파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기업과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이 득세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무대에서는 비정부행위자들과 시민사회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여론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유유상종과 상전이

공공외교는 어떠한 방향성을 담보해야 하는가? 상호구성적 공공외교의 작동을 새로운 세기의 외교의 모습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는 유유상종과 상전이 효과의 극대화라는 특징에 의해 작동한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상전이는 특정한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의도된 행위의 연쇄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아무런 계획과 의도없이 나타나는 현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처럼 네트워크 속에서의 상전이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은 높지만, 일단 임계점에 도달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외교의 주도적 행위자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행위자들에게 무대와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3.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공외교

현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는 기존의 발전국가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연상시키는 일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를 마치 마케팅으로 여기는 듯하다. 따라서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같은 구호에 집착한다면 공공외교의 본질로부터 한참을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외교는 판매나 협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며, 상호교통이며, 교환이다. 향후 각국의 공공외교는 이러한 인식 하에 지식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 차원의 문화네트워크를 엮어내는 매력의 공식을 개발하는데 집

중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 주체는 국가가 아닌 절대다수의 대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새로운 공공외교의 추진은 디지털을 통한 공공과 외교의 진정한 수렴을 바탕으로 매력의 상호구성과 전지구적 문제해결 가능성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결 론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나타나는 정치적 변화는 ‘이슈의 다양화’, ‘의제의 다양화’에 따른 소집단 동원체제’, ‘전지구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정치의 융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어떻게 다양한 이슈들을 조절하고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힘(power)의 원천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네트워크의 시대에 통제 대신 부각되는 것은 동조화(synchronization)이며, 국내와 국제의 구분이 없고, 국가와 초국가적 행위자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네트워크의 세상에서는 세계정치의 모습이 이와 같은 수렴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아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외교는 행위자 상호간의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매력의 구성과 전지구적 문제들의 해결에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역할, 정책과 외교의 문제를 이 틀 안에서 파악해 보면, 근대를 지배했던 민족국가 초기의 모습이 민족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국가의 이득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반면에 냉전 시대의 국가는 폐쇄된 블록 안에서의 문제해결 전략과 그룹 짓기를 통해 국가의 생존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탈냉전과 네트워크 시대의 민족국가는 민족의 틀을 벗어던지고 열린 연결망의 이름의 다수에게 의존하는 집단소싱 혹은 열린 혁신 전략을 택함으로써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피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정책적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세상은 한없이 좁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를 더욱 좁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으로서의 공공외교는 멀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를 바라보아야 한다. 즉 마

케팅적 마인드에서의 타국에 대한 자국의 매력전파나, 국가이미지의 향상, 호감을 얻기 위한 대외원조가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 대한 교육과 정체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 1 절 동질성과 이질성의 공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객관적인’ 사물세계, 즉 인공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공물은 거주 공간인 건물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위적 공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합적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의 도래는 방통융합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공동의 삶을 가능케 하는 ‘주관적인’ 인간관계망이다. 이러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통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간들을 매개하는 사회 구성원을 연결하는 결합 또는 접합 방식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집단의 분화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들 사이의 새로운 결합 및 재구성 등 유동적이고 이질적인 인간관계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네트로폴리스(netropolis), 사이버스페이스, e-아고라(e-agera),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등은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치의 상호연관성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공간개념뿐만 아니라 정치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융합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 용어인 ‘디지털 융합’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상응하는 용어로서 변용될 수 있다. ‘융합’이라는 용어는 ‘관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문제는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이 과학기술인가 아니면 인간 자신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망은 현실적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디지털 융합 환경의 진전으로 그러한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인 웹’(www)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동시에 인간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만든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망 형성의 매개 수단 및 형식의 변화는 사회영역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영역, 국제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디지털 융합 환경이 인간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더불어 이러한 환경이 국내 공공영역과 글로벌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인간조건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화와 공공영역의 위상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디지털 융합 환경과 삶의 양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상적 분석 이후, 다음은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변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은 상호동조와 차별화라는 이중적 모습을 표출시키고 있으며, 공간적·시간적 영역을 초월한 관계망을 형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국제관계에서 권력(power)의 핵심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이 초래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모습들과 국가 간 관계, 국가의 영향력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가 국가의 국제관계 설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글로벌 공공외교의 확대 가능성을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파악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행할 것이다.

제2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제정치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는 일정 영역의 존재자만이 그 존재성을 현실화한 단계에서 층위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행위자들의 존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컨버전스의 의미와 범위는 고정적이기 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확대·진화되었다. 초기 통신의 디지털화에 의해 통신·컴퓨터 간의 컨버전스가 시작된 이후 디지털 무선통신의 등장과 유선통신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무선 통신 간의 컨버전스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통신의 확대와 방송 콘텐츠 및 송출방식의 디지털 화에 따라 방송·통신 간 컨버전스가 주요 관심사가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폴(Ithiel de Sola Pool)은 컨버전스를 ‘미디어간, 즉 우편, 전화, 전신과 같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과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Henry Jenkins 2006, 28). 젠킨스는 컨버전스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흩어진 미디어 콘텐츠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도록 촉진하는 문화적 변화라고 정의한다(Henry Jenkins 2006, 17). 따라서 컨버전스는 단지 기술적 변화가 아닌 기술, 행위자, 정책의 역동성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재영 2006. 3).

정치 측면에서 볼 때 컨버전스의 의미는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조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즉, 기술적, 산업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정치적 인간’, ‘매개하는 제도’,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래된 정치의 문제, 즉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누구를 대의하며, 어떻게 조정하고 결정하여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재조명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컨버전스가 초래하리라 예측되는 변화로서 제시되는 ‘선택의 자유’, ‘참여의 확대’, ‘다양성’ 등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슈(issue)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즉 ‘큰 이슈 대규모 동원체제’에서 ‘작지만 이슈별 소집단 동원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평평한 세계’로 상징되는 세계 경제의 통합화 경향에 더해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 있어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테러, 환경파괴, 질병, 경제위기와 같은 부정적 영역의 글로벌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발전 궤도에 동승하지 못한 후진국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안전보장 문제의 급속한 확산과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 증대뿐만 아니라 동일한 국가 내부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격차의 확대는 새로운 대립과 갈등, 분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측면에서 이슈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컨버전스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 전지구적 목표(혹은 목적)가 하나로 수렴되는 ‘정치의 컨버전스’를 들 수 있다.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전통적인 의제였던 인간안전보장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중심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었고, 그 목표 또한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용을 거쳐 그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정치의 무대에서는 환경파괴, 마약밀매, 질병, 경제 위기 등 개인과 커뮤니티, 사회적 수준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은 비일상적 위협이 넘쳐나고 있으며, 더불어 생활환경의 궁핍에 따른 개인 생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증가는 그 대응에 있어 국제협조를 강하게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은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를 넘어서는 범세계적 연대와 목표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정보 접근, 수집, 발산의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에 있어서는 지리적 초역화 및 행위의 다양성으로 인해 개별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비정부단체의 영향력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적 연대뿐 아니라 범세계적 연대가 추구되고 있다. 이는 탈물질적 가치의 확산에 따른

대응이 영역별로 세분화된 국제협조를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대응, 커뮤니티의 대응, 개인의 대응이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로 수렴됨을 의미한다.

셋째,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국제정치는 의제의 다양화와 소집단 동원체제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주체적으로 인간안보와 관련된 이해나 인지를 형성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며, 타자를 설득하고 유도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의제를 조절하는 지력(intellectual power)을 가진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진다. 이는 국가가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의제와 동원되는 다양한 운동네트워크를 관리·통합하는데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재조정과 작동방식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는 유동적 네트워크의 확산을 가져오지만 전지구적 상호의존이 중요시되는 컨버전스 시대에는 ‘어떻게 이슈들을 조절하고 통합할 것인가’하는 것이 힘(power)의 원천이 된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세계적 차원에서 구현되고 있는 기술이나 산업, 경제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은 개별국가의 대응 방식에 있어 다양성의 표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수렴한다(everything is converging on digital)’라고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보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참여로 인한 ‘정치적 수렴’(convergence of politics) 현상이 더욱 특징적으로 표출된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네트워크 사회와 글로벌 공공영역

제 1 절 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인간조건의 변화

인관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인간의 삶을 조건 짓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적인 요소와 공간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동은 인간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동은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변화는 혁명적 성격을 띤 질적 변화라기보다 혁신적 성격을 띤 양적 변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의 변화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소통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변화가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간조건, 즉 시간성과 공간성의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 이어서 인간들의 소통방식의 변화를 고찰한다.

1. 시간적 차원의 융합

시간적 차원에서 인간조건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융합 시대 이전 인간의 삶을 조건 짓는 시간적 요소는 ‘계기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계기성은 시간의 지속적 경과와 연계된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의사교환, 그리고 만남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산업사회 시대 기술발전으로 소통과 해결과정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라는 조건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

디지털 융합 시대 이전에 인간의 삶에서 시간의 계기성은 여전히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기술적 융합은 전화 통신, TV, 비디오 그리고 컴퓨터 회사 간의 연합으로 이어지고, 또한 청중과 뉴스 제작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한다(Knight and Weedon 2009, 131).” 기술적 융합(convergence)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기존 방식에 도전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의 시대에 완전히 진입하게 될 경우, 시간의 ‘동시성’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동시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 동시성은 의사교환, 만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 시간대에서 진행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이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완벽히 실현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거·현재·미래의 동시적 존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우리는 융합 기술 수단의 덕택으로 세 시제에서 전개된 상황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가?

과학기술 차원의 융합(convergence)은 다른 영역에서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도구적 기술로서 사이트 교차적 이야기 구조는 소위 네러티브 융합(narrative convergence)을 가능케 한다. “네러티브 융합은 상이한 매체의 장애 의해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장들을 지지하는 의미를 조직화하는 인지 과정이고 논리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네러티브는 개념적 기술이 된다(Ruppel 2009, 283).”

이러한 정의를 원용하여 실제로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우리의 삶은 활동적 삶(vita activa)과 정신의 삶(life of mind)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현상세계에서의 삶으로 노동·작업·행위로 구성된다. 노동은 먹는 문제와, 작업은 기거 문제와, 그리고 행위는 인간의 공존과 연관된 활동이다. 이러한 삶은 현상세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간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의 계기성이란 요소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정신의 삶에서는 일종의 시간적 요소의 ‘융합’이 형성될 수 있다. 정신의

삶은 현상세계로부터 이탈한 순간 진행되는 삶으로서 사유(thinking), 의지(willing), 그리고 판단(judging) 활동으로 구성된다(Arendt 1978).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사유 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유 활동은 현재 시제와 연관된다. 반면에, 의지활동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래시제와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옳고 그름 등을 반추하는 활동이므로 과거시제와 연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활동들은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정신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시제는 계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한다. 연대기적 시간 개념에서 보면, 정신활동에서 시제는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존재하며 복잡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띤다. 이와 같이 정신활동에서 세 가지 시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한 덩어리’의 상태이며 동시에 다양한 형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인간의 삶, 특히 정신의 삶은 시간적 계기성보다 동시성이라는 요소를 지닌다. 기존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이질적인 요소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없지만, 디지털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사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 공간적 차원의 융합

인간의 삶은 공간적 차원이란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에 의한 네트워크 사회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달리 표현하면 전통적 공간 개념의 제약성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활동영역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 사적 영역, 사회영역, 공공영역으로 구분된다. 전통적 공간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사적 영역에 있으면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영역에 있으면서 공공영역에 참여하기 어렵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공간 이동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공간 이동은 당연히 시간적 제약을 수반한다.

현실 세계에서 세 영역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적 조건에서 가정생활 · 경제활동 · 정치활동에 참여하려면 공간 이동을 필요로 한다. 가정

생활은 사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은 사회영역에서, 그리고 정치활동은 공공영역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개인이 현재 어떠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 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융합된 과학기술의 덕택에 세 가지 문제를 동일한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사적·사회적·공적 공간은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융합되는 형태를 띤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이 세 영역이 동일한 영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질적 공간의 동시적 공존을 의미한다.

3. 행위 차원의 융합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드러남과 숨김이란 요소, 그리고 인간관계의 결합 양식의 변화를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익명성’과 ‘실명성’이란 두 요소의 위상 변화를 고찰하기로 한다. 현상세계에서 우리의 삶은 실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컨버전스 시대에 개인은 실명으로 활동하면서도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실명으로만 활동할 경우, 정치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은 정책결정에 익명이나 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근본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생활의 근본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적·국제적·비국가적 행위자들의 관계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동일한 것과 이질적의 것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이에 따른 정치적 삶의 양태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대적 행위의 기준에서는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해 인관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탈근대적 상황에서는 동일성과 차이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결합 방식이 강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성은 다른 것과의 구분 지음이라는 명

백한 경계 개념을 전제하고 있지만, 융합(convergence)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 근대성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결합 방식은 이미 과학기술 영역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탈근대적 정치에서 동일한 것은 고정되지 않고 항상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하며, 동일한 것과 이질적인 것 사이의 예기치 못한 접합 또는 결합이 가능해지고 있다. 동일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근대 정치에서는 계급적 유대가 강조되지만, 탈근대적 조건에서는 특정한 쟁점을 둘러싼 계급들 사이의 유대가 강조된다. 예컨대, 과거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 계급 내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이 강조되었지만, 디지털 융합의 시대에는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각 계급의 구성원들이 소통과 유대를 통해 새로운 쟁점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 또는 접합 양식은 쟁점이 달라질 때, 구성원들의 결합 양식 또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및 소통양식의 이질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결합·재구성·분화 양상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전 시대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양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정치 패러다임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2 절 사이버스페이스와 공공영역: 정치참여의 가능성 증대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정이란 사적 영역이고, 둘째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영역이며, 셋째는 공공영역이다. 이 공공영역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정치적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공공영역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함께 만나는 공간이고, 사회의 정치적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자신들의 자발적 견해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공간이다. 공공영역은 사회에서 발생한 이념이나 프로젝트를 상호 논의하고 토론하는 소통 공간이며, 아울러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위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공공영역의 원형은 아테네의 폴리스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영역은 근대에서 형성되었으며 20세기 중반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민주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공영역은 “지역/국가의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 미디어, 주권 국가, 참여적 시민에 기초해 형성되었다(Crack 2007, 34)”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공영역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와 더불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여기에서는 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공공영역과 정치적 삶의 양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주로 고찰한다.

1. 전통적 공공영역과 정치적 삶

인간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국가는 특정한 영토 내에 존재하면서 국민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반면에, 사회는 개개인의 경제적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영역으로서 생존을 위한 상호 공존이 의미를 갖는 영역이다. 반면에 공공영역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존재하면서 양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영역이란 개념에서 ‘공공’(public)은 ‘공개’, ‘드러냄’ 또는 ‘모두에게 연관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Arendt 1958, 50). 따라서 공공영역은 기본적으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자유의 영역이고 평등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특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다. 공공영역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언어행위, 즉 대화와 논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 영역의 참여자들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 영

역의 존속 여부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언행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공공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의해서 1950년대 말 제기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이익집단 정치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녀의 입장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냉전 질서의 붕괴와 더불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공공영역은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지적 노력을 통해 시민의 참여정치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으로 부각되었다.

역사적으로, 공공영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적(논쟁적) 공공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 사이에 심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결사체적(합의적) 공공영역이다. 두 번째 영역은 오늘날 시민운동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적 공공영역에서 네티즌들은 공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견해를 자유롭게 제시하기도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 사이에 공통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가상적 공간은 논쟁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합의의 영역이 되기도 한다. 즉, 이 공간은 논쟁의 장이기도 하고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듯 가상적 공공영역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두 가지 형태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공공영역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영역이며, 달리 표현하면 공적인 의견의 소통적 형성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보와 견해를 소통하는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공공영역을 가능케 하는 주요 원리는 다원성이다. 이 영역은 말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망(human web of relations)이다. 물론 이 관계망은 참여자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언어행위를 할 경우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다가, 흩어지면 가시적 형태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 공간은 활동할 때는 현실태로,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때는 가능태로 바뀐다. 가상공간도 이와 유사한 측면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망은 근대적 조건에서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만, 융합의 시대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양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

2. 가상적 공공영역의 형성과 정치적 삶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적·정치적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동인을 특징짓는 개념이 바로 ‘융합’이다. 융합은 기본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 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적 공공영역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첫째, 공공영역을 특징짓는 요소인 ‘가시성’과 ‘불가시성’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공공영역은 가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영역에서의 소통과 대화는 드러나는, 즉 공개되는 현상이다. 공공영역에서 행위자는 ‘실명’(實名)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의 언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노출된다. 공공영역은 행위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가상적 공공영역은 가시성과 불가시성을 모두 갖게 되었다. 가상적 공공영역은 사람들이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 가상공간은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영역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가상공간은 다른 매체나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출현과 정치적 논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어 가고 있다. 시위는 중앙의 한 광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현장은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 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완전히 진입할 경우 의사소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다양하고 더욱 복합적인 양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미디어 체제에서 관계양식은 ‘하나 대 다수’의 양태로 나타나지만,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그 양식은 ‘다수 대 다수’의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형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융합이다. 개인에 연관된 것은 ‘사적’이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연관되는 것은 ‘공적’이다. 이렇듯,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친밀성 또는 은폐를 특징으

로 하지만, 후자는 다원성 또는 개방을 특징으로 한다.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은 공적인 문제보다는 사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기 쉽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주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상공간은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는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개인과 공동체라는 전통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Papa-charissi 2002, 2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네티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삶과 연관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이 문제는 사적인 차원을 떠나 공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 사적인 동기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사이버스페이스는 사적인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가상적 만남의 공간은 공공영역과 민주주의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네트의 민주적 잠재력은 자본에 의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급속한 ‘식민화’로 인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그 민주적 미래를 성취하는 데 요구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심의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은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제 3 절 글로벌 네트워크화와 공공영역

국가는 영토 내에 존재하는 공공영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이라는 현상세계는 전통적으로 영토적 국민국가라는 구체적 공간과 연

계되어 왔다. 고전적 의미의 공공영역은 국가적 미디어, 주권국가, 참여시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능력을 갖춘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능력은 기술적·제도적·조직적 능력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을 선택적으로 연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있다. 제도적 능력은 국민국가에 의해서 이용되는 규칙과 절차의 탈규제와 연관된다. 조직적 능력은 네트워크화를 모든 영역의 활동에 대해 유연하고, 상호적이고 무경계적인(borderless) 형태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조건 아래에서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은 점차로 도전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이 세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를 구조화하는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과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영역,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인간관계망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으로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국가적 차원의 공공영역이란 제도적 기반을 여전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영토적으로 제한된 영역인 공공영역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글로벌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국가

영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체계가 글로벌 차원의 세계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은 과거에 비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근대국가의 역할과 위상이 약화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민사회가 새로운 정치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다. 사회의 유형은 다양하다. 국민국가 내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적 사회’(national society)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사회를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행위와 목표에 있어서 글로벌 또는 국제적 준거 틀을 지닌 비정부단체

(NGO)들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를 ‘글로벌 시민사회’로 규정한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비정부단체(INGO)는 인권의 보편적 신장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활동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전술로서 미디어를 활용한다.

둘째, 세계화 과정을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운동들 역시 시민사회의 한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운동들은 범세계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운동을 촉진시키고자 행위 및 조직의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범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며, 세계화 과정을 변경시키면서 세계의 사회정치적 환경을 재규정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의 활동에서도 통신매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또 다른 예이다. 이 운동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체계의 정보 확산,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발적인 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과 무선통신은 대화와 논쟁, 그리고 집단적 정책결정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무선통신을 통해 조직화된 시위는 국가 내에서 시민들을 조직하고 동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연대를 촉구하는 운동의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화 수단은 SMS(short message service), 이메일, 블로그, 페이스 북(Facebook)의 공지, 유튜브(YouTube)의 비디오 등이다. 주류 미디어는 종종 시민들의 이러한 보도를 재방송하고 재구성한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민사회는 기존의 정치제도나 매스 미디어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기술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국민국가는 쟁점의 세계화 과정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국민국가는 세계화로 야기된 위기를 경험하면서 세 가지 수단을 통해 변화를 피하고 있다. 첫째, 국민국가들은 서로 협력을 유지하는 기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각 국가들은 EU, NAFTA, APEC, ASEAN 등을 통해 세계화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국가와 달리 ‘네트워크’ 국가가 부상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은 글로벌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국가들은 또한 정당성을 증대시키려는 시도 또는 문화적·정치적 충성심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권력과 자원을 분할시킬 수도 있다. 네트워크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권과 책임의 공유, 거버넌스 절차의 유연성,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시민과 정부 관계의 다양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국가는 조직적·기술적·정치적 차원에서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국민국가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전에 영토성과 권위를 통해서 활동하였던 조직들이 이제 같은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조직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기술적인 조정 문제는 통신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는 정치적 조정 문제는 효과를 촉진시키기보다 오히려 국가의 조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시민이 긴밀하게 연계되려면 관료적 자율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정치적 조정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2. 글로벌 공공영역: 소통·거버넌스·행위자 측면

글로벌 시대 인간의 삶이 국가라는 영토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듯이, 인류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활동영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정치체제, 즉 글로벌 공공영역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과 기존 국민국가의 대체하고 통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Castells 2008, 89).

세계화 과정은 인류의 공존과 관련된 쟁점을 국가영역에서 세계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마찬가지로, 공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 영역으로서 공공영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따라서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점차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전세계적 상호연관성은 전지구적 공공영역 출현을 위한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행위자들 사이의 대화

기회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국가를 초월한 공공영역을 확장시킬 전망을 열어 놓았다. 물론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공공영역의 확장을 자동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호 연관성의 범주, 즉 소통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공공영역의 출현에 유리한 환경의 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통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공공영역에 따르면, 행위자는 국가라는 경계 내에서의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접촉을 통한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스페이스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미디어는 전지구적 공공영역의 이론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초국가적 통신의 역사는 오래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상당히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소통의 시공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지구적 공공영역의 전제조건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소통적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기술은 이전의 통신매체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속도·영역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전지구적 공공영역은 단순히 기술적 구조에 의해서만 확보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술적 구조의 발전은 전세계적 민주정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둘째,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전통적으로 안과 밖, 주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정치영역과 무정부 상태인 국제 정치 영역은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주권은 고도로 이상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자율성은 세계화의 심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아 왔다. 국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의존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치적 권위의 실질적 재구성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대중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조직적인 변화에 조응하여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행위자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공영역의 기

본적 요소들은 공통의 영토적 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공영역은 ‘잠재적’ 실체이다. 그러므로 초국가적 행위자 네트워크의 심의 영역은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 상호 친화성은 ‘면식적’(face-to-face)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초국가적 소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 광범위해지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현실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성찰적 대화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한계도 지속적으로 극복될 것이다.

초국가적 공공영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건들에 대한 규범적 비판을 제공하는 이상형이다. 현실적 기술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맥퍼슨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소박하게 제시하였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이 정치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듯이, 새로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은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공공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가능성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공공영역이 1950년대 후반 아렌트에 의해 제기되었고, 하버마스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1980년대 시민운동을 통해 그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글로벌 공공영역은 아직은 초기단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질적 전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영역과 공공외교

전통적으로 외교는 정부외교였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 공공외교는 새로운 외교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공공’이란 사적인 것을 넘어서 특정한 사회 조직에 공통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외교는 다양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공영역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공공외교는 권력관계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동의 언어가 출현하는 소통 공간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외교는 전통적으로 국

가체계에서 작동하는 공공영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의미 공유로 이해되는 공공외교는 지속가능한 세계질서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흔히 공공외교를 국가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대외적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는 지속가능한 세계질서의 실현을 위한 공공영역의 형성을 국내와 국제의 무대 모두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의 증대가 국부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중상주의 시대의 캐치 프레이즈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외교의 증대가 국가 브랜드의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공공외교를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정치의 무대에서 증가하는 공공영역의 확산은 공공외교의 의미를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네트워크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의 변용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친 지리적 경계의 초역화 및 보편적 가치기준의 확대라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맹신화를 가져왔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비정부행위자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과 글로벌화의 심화는 초국적 행위자들에 의해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상호동조와 차별화라는 이중적 모습을 표출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 빈곤문제 등 국제협조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화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효과를 가져 오지만, 수평적 의사소통의 확대로 인해 이해 조정의 어려움과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반응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습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정책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라는 영역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이 국제질서를 통합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단편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변화와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간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한다.

제 1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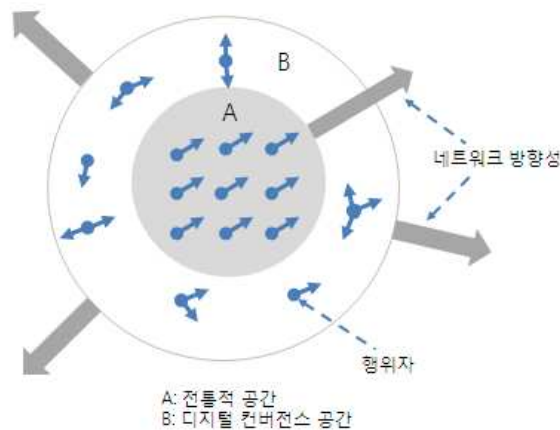
1. 귀속의 단편화와 혼종성(混種性)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는 디지털 기술의 진전에 의해 통신과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가 디지털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체상의 영상, 음성, 문자로 대표되는 정보가 디지털화됨으로써 매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따라

서 디지털 컨버전스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사회는 온라인 관계망을 새로운 커뮤니티로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대인관계를 물리적 공간으로 부터 해방시키며, 온라인을 통해 형성 되는 사회관계가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회로 작용한다(Lea & Spears 1995; Parks & Floyd 1996). 특히 네트워크의 발달은 개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직접 표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기실현의 사회’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의 공간 변화, 즉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동시적 변화는 개인, 국가, 초국적(transnational) 행위자들에 의해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상호동조와 차별화라는 이중적 모습을 표출시키게 된다. 특히, 환경문제, 빈곤문제 등 국제협조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화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효과를 가져 오지만, 수평적 의사소통의 확대, 심지어는 행위자들의 분산으로 인해 이해 조정의 어려움과 개별 국가의 정책 자율성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간의 변화는 발언권에 있어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바, 과거에는 비명시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혹은 미디어에 의하여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만이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류춘열 2005, 47).

[그림 3-1] 커뮤니케이션 다양화와 탈공간화



[그림 3-1]은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화와 탈공간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A영역은 전통적인 공동체적 결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과 커뮤니티 영역이 균일적이고 획일적인 관계에 있으며, 개인이 속한 영역에서는 개인에 대한 구속이 강한 상태이다. 또한 사적 영역과 공공영역의 일체는 일대일 커뮤니케이션(1×1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인 집중화와 정책결정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고, 전체 질서와 통제에 벗어나는 행위자는 배제되거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 개인들의 존재양태와 네트워크 공간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B의 영역은 개개인의 행동이 다양화하고 개인에 대한 구속력과 지배력이 약한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개개인의 개성화, 다양화가 진전된 결과 개개인은 탈개성화하게 되고, 공간개념은 희박해지며, 행위자 개개인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과 네트워크의 방향성이 불명확해진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B의 경우 특히 공간이 개인에 대해 구속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단적으로 약화된 상태이다.

개개인의 다양성 표출은 사회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사회가 불투명해지면 질수록 개인은 투명도가 높은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 사회 등 대규모 영역의 규범과 규칙 등을 무의미하게 하고, 세분화·단편화·부분화한 소규모의 영역에 적용되는 규범과 규칙이 전체를 대표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개인과 불특정 다수의 연결(1×n 커뮤니케이션),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의 연결(n×n 커뮤니케이션)은 탈영역화, 정책과정의 수평적 참여라는 임파워먼트 강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임파워먼트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력’(power to)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power over)이라는 갈등적 관계의 측면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신감과 역량의 강화부터 정치적 차원의 기회구조까지를 모두 포괄하며, 권력이 사회구조적 변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재배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양난주 2007, 242).

정책형성과정에 있어 임파워먼트의 확대 혹은 강화는 참여에 대한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부여하게 된다. 네트워크 확산과 이에 따른 임파워먼트 확대에 의한 참여 유형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분배적 참여(nondistribution participation)로 기존의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형도 가해지지 않는 ‘유사참여’(pseudo-participation)의 형태가 있다. 둘째로는 명목적 참여(normal participation)로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사결정 결과를 크게 바꾸지는 못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재분배적 참여(redistributive participation)로 이는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가 변형되는 경우를 말한다(양난주 2007, 248).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참여는 세 번째 유형인 권력의 재분배에 의한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와, 기업, 혹은 미디어가 독점해 온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통제의 혁명’(Control Revolution)으로 일컬어진다(Shapiro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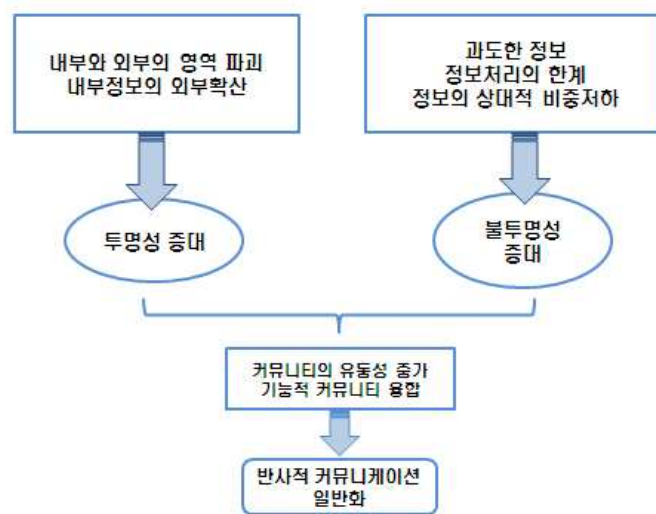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참여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간의 벽을 허물고, 그 결과 외부로부터의 내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내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보독점의 약화는 내부로부터의 외부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로 인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가치(particularity)가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네트워크의 확산은 방대한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불가능하게하고, 개인이 관여할 수 있었던 정보의 상대적 비중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네트워크 확산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커뮤니케이션의 불투명화는 정책요구가 특정 쟁점(issue)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기중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원적인 방향(orthogenetic)이 아니라 복수의 방향(heterogenetic)으로 전개됨으로써 집단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단편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차원에서 재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기능적으로 커뮤니티가 서로 교차하는 혼종성(hybrid)의 확대로 나타난다. 특히, 혼종성

의 확대는 커뮤니티 내부의 유동성을 높이고, 다른 커뮤니티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반사적 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네트워크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2. 배타성의 증대와 통합의 저하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국제관계에서 개인과 커뮤니티들의 주권국가와 불일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자본의 흐름·기술·정보에 중점을 두는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를 등장시켰다. 가상공동체의 등장은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신속한 흐름을 촉진하고 국가권위를 탈집중화(discentralization),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탈지역화(dislocation)시키면서 세계정치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Rothkopf 1998, 334~336).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달은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국제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정책결정 방식에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는 국제질서의 통합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단편화를 초래할 것인가? 프리드먼(Tomas L. Friedman)은 세계화를 국가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 ‘글로벌화 1.0’(1420년대~1800년대), 기업간 교류가 확대된 ‘글로벌화 2.0’(1800년대~2000년),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화 3.0’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글로벌화 3.0’의 시대는 균일화(flat)된 세계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정의하고(Friedman 2005), 균일화된 세계는 통합을 촉진시킨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반해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글로벌화한 세계는 프리드먼이 정의하는 것처럼 균일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개인들이 만들어낸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비타협적(spiky)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비판한다(Florida 2005).

프리드먼과 플로리다의 견해를 통해서 볼 때, 글로벌화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동시에 다양성이 함께 나타나는 통합과 분산의 공존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글로벌화의 진행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자체에 내재된 방향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화 자체에 내재된 방향성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개인의 귀속이 단편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속의 단편화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준국가적(sub-national) 집단으로의 귀속이 강하게 나타나고, 국가 귀속에 따른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Hungtinton 2004). 또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민족문제, 국가 간 대립, 종교대립 등도 귀속집단으로의 귀속감이 강해지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탈귀속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지만, 국경을 초월한 금융자본은 위험회피(risk hedge)라는 측면에서 특정지역으로의 귀속을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영역에 있어서는 균일한 문화로 세계가 보편화되거나 혹은 ‘카피-캣’(copy-cat)이 일반화 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적 환경에 글로벌한 문화를 재편성해 나가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은 글로벌리즘에 대한 절대적·단편적 이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타국과의 접촉이 오히려 자신이 귀속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귀속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커뮤니티에 대한 배타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커뮤니티 간 배타성의 심화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보증하는 안정된 사회적 귀속의 장(場)으로서 ‘국민’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 연령에 근거한 집단적 아이덴티티의 유동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집단적 아이덴티티의 유동화는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자연발생적인 커뮤니티가 아닌 미디어를 매개로 한 다원적 커뮤니티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들에 있어 상호 이해의 대립이 잠재되어 있는 다원적 커뮤니티의 증가는 새로운 안정된 공통의 기반을 요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커뮤니티의 안정과 연결된 개별국가의 경로의존성(national path dependency)을 강조하는 네오내셔널리즘(neo-nationalism)과 그 반대적 의미로서 국가를 초월한 세계적 동형화(world-wide isomorphism)를 강조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의 확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네오내셔널리즘은 내셔널리즘처럼 국민, 혹은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배제하면서 자신만의 안정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를 의미하며, 개인의 아이덴티티 위기가 네오내셔널리즘의 대두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내셔널리즘을 초월한 공생 커뮤니티의 창조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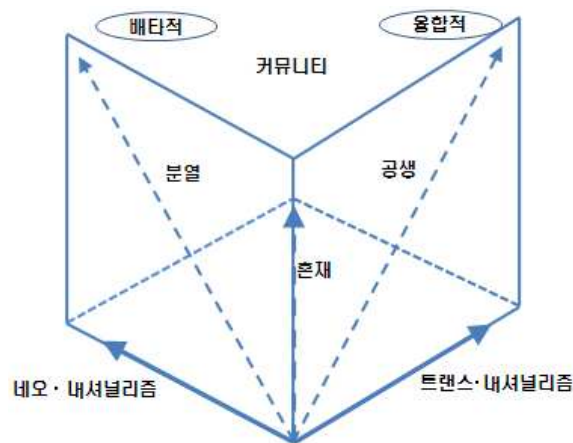
개인의 아이덴티티의 귀결로서 내셔널리즘은 역사를 자유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주관적으로 구성된다. 내셔널리즘이 출판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출판미디어를 통해 구축된 것으로 규정되는 것처럼(Anderson, 白石 譯 1997), 디지털 컨버전스는 시간과 공간의 균질화를 통해 유동화하고 단편화하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연결시켜 불안감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인식을 적극적으로 재생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아메리카나이제이션(Americanization)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

디어는 이민노동자를 미국 국민으로 통합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 보다 오히려 타국과 타민족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를 강조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모체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 만들기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이 침략전쟁의 실상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개인들의 국가상과 국가이미지 공유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라는 집단적 아이덴티티를 통해 우리와 다른 타자를 구별하는 국가적 애착 및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배타성을 심화시키고 있다(齋藤日出治 2008, 18-19). 따라서 개인과 국가, 심지어 기업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차별화를 추구하게 되며, 그 결과 형태나 구조면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차별전략을 채택하고 과거를 통한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 간 교류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형화로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움직임을 확산시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문화(異文化)와의 접촉과 과거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현재의 모습

[그림 3-3] 내셔널리즘과 국민통합 구조



이 재구축되는 것으로 ‘융합’과 ‘상생’이라는 ‘상호교류주의(inter-culturalism)’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의는 사회적 마이너리티(minority)에 대한 배려, 문화적

· 정치적인 차이의 인정을 통해 커뮤니티 안팎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별적 이해와 연대성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 규범에 대한 조응을 우선시 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아이덴티티와 융합적 아이덴티티의 공존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3-3]은 아이덴티티 귀속을 통해 나타나는 커뮤니티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충되는 두 가지 내셔널리즘의 대두는 안정된 집단적 귀속 상실과 자신의 존재를 보증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의 증가로 인해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키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고전적 형태인 내셔널리즘의 재발견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한쪽은 배타성이 전제된 커뮤니티로 나타나며, 다른 한쪽은 공생 커뮤니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타성과 융합의 공존은 사회구성원의 국민적 통합보다 계층 간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융합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제 2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제관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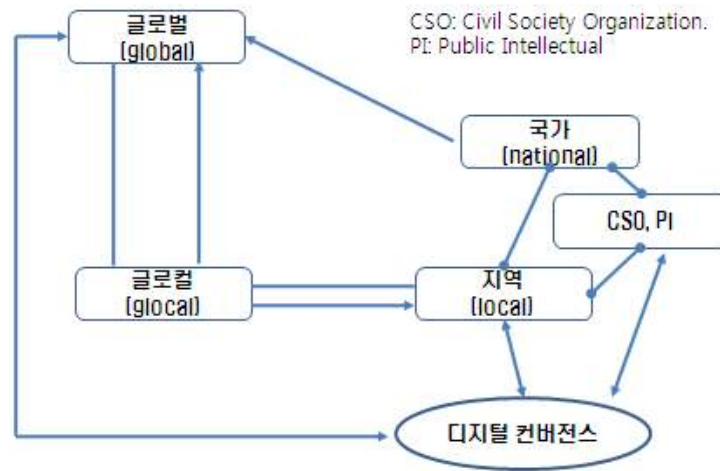
1. 주체의 다양성과 중층적 관계의 심화: 지역성의 재구성

개별 국가의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화와 배타성의 증대가 결과적으로 국가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글로벌화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친 지리적 경계의 초역화 및 보편적 가치기준의 확대에 귀결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토착적 가치의 주장, 지역적 협력의 강화, 글로벌리즘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으로 표상되는 로컬리즘(Localism)은 나날이 그 힘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절대적·단편적 이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즉, 각국을 둘러싼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놀라운 병치현상(juxtaposition)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귀속의 단편화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은 타국과의 접촉을 자신이 귀속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동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신이 속하지 않은 커뮤니티에 대한 배타성을 심화시킨다. 한 쪽에는 글로벌화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국가 차원에서 정체성을 유지, 강화, 재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국제사회는 분산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은 물리적 유동성뿐만 아니라 가치의 파급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성의 변형을 촉진한다. 그러나 변형이라는 것이 지역으로의 침투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신속하게 와해시킴으로써 보편화를 촉진하는 측면과 지역적 특성을 보존시키는 동시에 그 나름의 자생적 토대 위에서 다원화를 촉진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친 지리적 경계의 초역화 및 보편적 가치의 확대에 대한 맹신화를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4) 국제관계의 다층적 구조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토착적 가치의 주장, 지역적 협력의 강화, 글로벌리즘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으로 표상되는 지역이 국제관계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한 시간과 공간의 응축은 모든 지역성의 소멸과 세계의 동형화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레크너(Frank J. Lechner)와 볼라이(John Boli)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지구적인 규준(global rules)은 지역에 기반을 둔 행위자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며, 전세계적 전범(world models) 역시 지역적 상황에 입각해 수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지구적 수준에서 증대되는 유사성은 결국 지역적 수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박길성 2007, 118). 이 점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국가 간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국가의 특수성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으며, 글로벌과 로컬은 상충될 수도 있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편성·특수성, 동질성·이질성, 통합·분리, 중앙집중화·탈중앙화, 융합·대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행위자들의 이해와 연결된 네트워크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원적 국제정치는 국제정치의 네트워크가 물리적 네트워크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위 ‘전방위형(all-channel)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지구적(global), 지역적(regional), 국지적(local) 층위에서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기 다른 허브(hub)를 이루어 엮어내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경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참여 지식인(Public Intellectual),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이 정보의 수집, 축적, 분석, 조작, 교환 등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주체로서 등장함으로써 피플파워(People’s power)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이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작동시킴으로써 국제정치의 모습을 변용시킬 것이다.

2. 국제관계의 링크(link)화

디지털 컨버전스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의 진화는 국제정치에 있어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문 순페이(公文俊平)는 정보화를 군사화, 산업화 이후 근대화의 최종단계에 출현하는 사회(last modern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公文 2004). 군사화 국면에서는 군사력이 사회를 경영하는 주요한 힘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산업사회 국면에서는 경제력이, 그리고 정보화 국면에서는 타자를 설득하고 유도하는 지력(intellectual power)이 힘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지력이 권력의 원천인 정보화시대에 있어 국제관계는 타자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한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node)들의 집합”이다(Castells 2004, 3). 노드와 그들을 연결하는 링크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인간사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연, 혈연에서부터 교통망, 방송망, 통신망이나 상품의 판매망과 종교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움직인다. 국제정치 영역에서 관찰되는 정치군사 동맹이나 국제무역, 사람과 문화의 교류 등도 모두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국제정치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누가(who)’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가이다. 이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인하여 국제정치의 권력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경합에서 어떠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지니는 네트워크가 득세하느냐의 문제는 이슈 영역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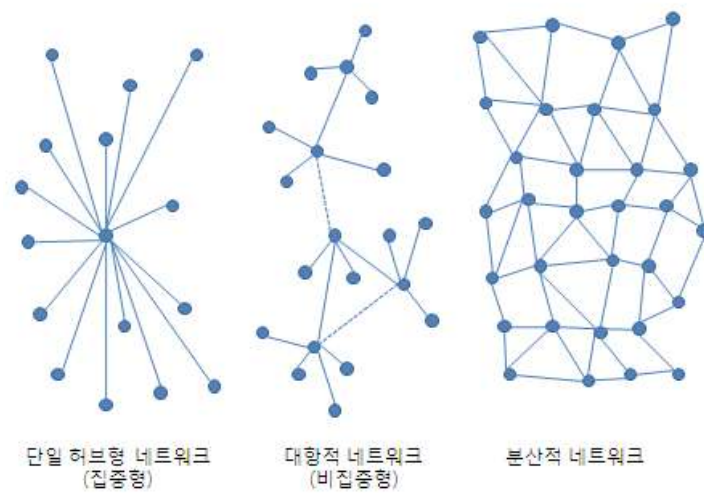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인 차원에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지식패권을 발휘하는 ‘단일 허브형의 네트워크’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재편 시도가 이러한 단일 허브형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대항적 네트워크(resistant network)’이다. 특히 반미운동이나 반세계화 운동의 부상, 그리고 다양한 지식네트워크의 확산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가 보이는 경합은 전통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 네트워크와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비국가 네트워크의 경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국제정치는 기존 국가 행위자가 중심이 되는 ‘단일 허브형 네트워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이 득세하는 극단적인 대항적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지도 않는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국제정치는 복합적인 특징을 내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특징의 국제정치는 패권이 소멸되는 무정부상태(anarchy)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국제질서가 규범(norm)이나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이거나, 단일한 정체성으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모습은 비집중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각 사이트는 네트워크 간 연결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연동됨으로써 소수의 사이트에 집중되어 있다. 인기가 있고 인기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포털 사이트가 링크를 집중시키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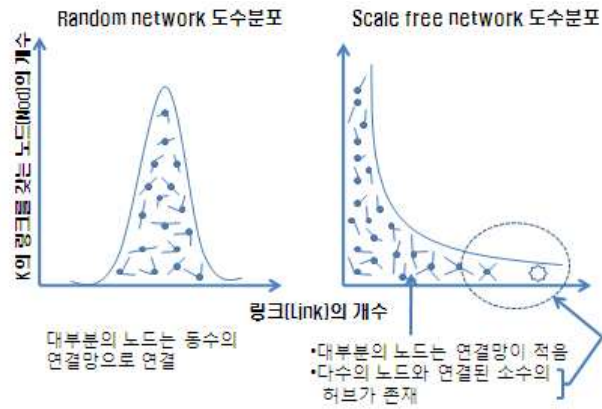
키의 법칙(Becky's law) 혹은 멱함수(power law)'가 나타나고 있다(Barabási Albert-László, 青木 2002).

[그림 3-5] 네트워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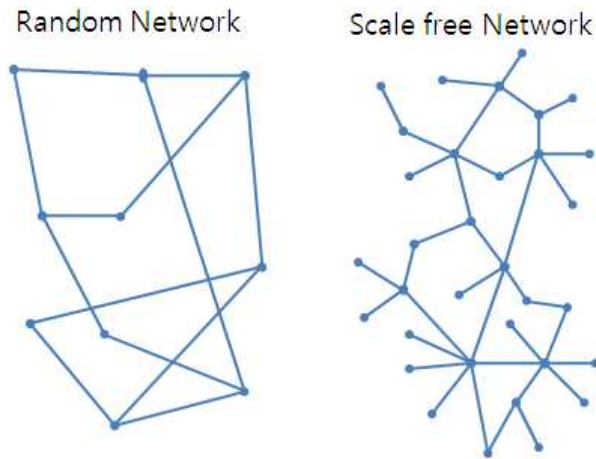


예를 들어 교실의 학생들의 신장을 측정할 경우 극단적으로 키가 작거나 큰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중간에 분포하는 정규분포로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베키의 법칙은 키가 큰 학생이 일부 존재하고 키가 작은 학생이 무수히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종모양의 정규분포 보다는 소수의 행위자나 허브를 통해 연결고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멱함수분포를 취한다. 이 점은 노드(node)와 노드의 연결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 클러스터를 단위로 링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힘은 단순히 연결의 수가 많다는 정량적 수준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로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진원지로서 커넥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그림 3-6] Random network와 Scale free network



Albert-László Barabási (青木薫역) 『新ネットワーク思考—世界のしくみを読み解く』
日本放送出版協会, 2002年, p.103.



이런 현상은 [그림 3-6]처럼 종형(bell curve) 분포가 아닌 불균형성(unevenness) 네트워크의 특징인 단조 감소 커브로 나타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 free network)를 통해 설명력을 얻는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희소한 허브로부터 많은 작은 노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위계가 있을 뿐 전체를 특징짓는 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쟁적 환경에서 링크수의 증가와 적합성을 지향하는 노드들이 존

재할 뿐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정해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드와 링크의 추가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 상의 네트워크의 특징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국제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림 3-5)처럼 국제관계는 집중형에서 비집중형으로 전환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영제국의 네트워크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 집중형 네트워크의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미·소 냉전체제의 등장과 소멸 과정, 현재의 지역통합 움직임 등은 국제관계가 비집중화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렇다고 국제관계가 평등성을 전제로 한 분산적인 네트워크의 모습으로의 방향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들이 커넥터로서 역할과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넥터로서의 영향력 유지와 쇠퇴, 더 나아가 새로운 영향력 소유자로서의 등장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가 다량의 트래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네티즌들이 다른 포털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국제정치는 소수의 국가를 클러스터로 하는 네트워크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을 클러스터로 하는 ‘네트워크 진영 간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권력분포(distribution of power)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합의 특징이 물리적 실체를 점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위한 ‘비전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진영 간의 경합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정치의 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노드, 클러스터, 커넥터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보다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인 행위자의 능동성과 활동성에 주목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3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가치정치의 일반화

1. 정치적 주체 형성으로서의 문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뿐만 아니라 발신의 확장으로 인한 문화와 가치의 다원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응축으로 특징 지워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에 의해 언어와 문화가 서로 얽혀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현실에서 탈공간화는 다른 문화를 갖는 사람들과 대량으로 끊임없이 접촉하는 상황이다. 이질적 타자와의 일상적 접촉은 상호 이해와 우호의 생활양식을 산출할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그 이상으로 상호 반발과 배척, 적대관계를 초래할 위험성을 갖는다. 이 점은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의 공통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지구적 상호의존과 연결의 구조 속에서 주체적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나 인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이다. 특히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국제정치 하에서 경제적, 물리적 안전에 맞서서 자유, 자기표현, 삶의 질에 대한 갈망을 중시하는 탈물질적 가치가 중심에 위치하는 현대정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증폭된다.

우선 탈물질적 가치의 추구하고 그것을 위한 이해나 인지에 있어 중요시 되는 것은 정체성일 것이다. 정체성이란 사회적 행위자가 여러 사회 구조들과 폭넓은 관련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어진 문화적 속성 또는 속성의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분별하고 자신의 인식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다(박길성 2007, 112).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해 외적 환경이 유사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수렴현상 속에서 커넥터로서의 역할과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세계 문화(정치문화, 사회문화, 경제문화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문화와 문화의 관계에서 주변의 문화가 중심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문화의 적절한 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모방하거나 거부를 통해서 자신의 특수성을 글로벌의 것과 접합시켜 매개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물질적 권력관계를 강조하는 ‘하드파워(hard power)’가 아니라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역할이다. 즉, 행위자의 속성이나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념과 문화적 자원에서 나타나는 권력이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권력은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이론이 상정하는 권력개념으로서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이라기 보다는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행위자들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환경, 인권, 보건,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인식되면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국제규범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국제규범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 즉 국가 간, 개인 간, 기업 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구조적 권력의 속성을 나타낸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해 심화되는 세계화에 대한 주요 의제는 무역, 생산, 투자,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세계화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은 경제영역은 물론이고 국가 간 관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제가 어떻게 확대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외연과 내포가 무한히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며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긴장의 근본적인 본질은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의 핵심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김없이 표출된다(박길성 2007, 99-100). 이 점은 구조적 권력 간의 대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치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가 주요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가치형성의 근간인 문화를 둘러싼 쟁점은 동질화와 이질화의 긴장과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화·국제화는 문명(civilization)에 대한 관념을 중심으로 국가들 간의 상하분류라는 서구 열강의 편견으로 비판되어 왔다. 국제

화라는 말은 ‘타자 = 이문화’라는 관계성의 차이를 강조한다. 국제화가 “무엇인가를 많은 국가들의 통제 혹은 보호 하에 두는 것 to bring something under the control or protection of many nations”으로 정의되는 것처럼 그 내면에는 “국제화하는 것은 서구국가들이고 국제화되는 것은 비서구국가, 혹은 타민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식론적으로 보면 타자를 인식하는 주체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주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타자를 자신의 세계관 주변에 위치시켜 구조화시키는 것이다(前川 2005, 55~57).

따라서 행위적 측면에서 문화는 그 주체가 서구이고 객체로서 비서구사회는 필연적으로 서구사회에서 생성된 규칙과 기준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회가 우월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열등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확립된 나라가 우월하며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사회가 우월하다는 주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각인된다. 결국 문화는 불평등한 시스템을 떠받치는 헤게모니의 한 형태로 (Lechner and Boli, 윤재석 역 2006, 65), 국제정치의 장에서 행위자의 자격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체성(subjectivity)을 가진 행위자들의 지위와 존재의 수준을 결정짓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최정운 2007, 54~55).

특히 관계성이 중시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는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생산과 수용의 구분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가치의 다양성을 잉태한다. 오히려 글로벌 가치의 형성은 국지적 문화가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변형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나름의 자생적 토대 위에 다원화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동연 2006, 73).

그러나 이 같은 가치의 변용에 의해 문화의 특징이 상실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구조적 권력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 재생산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한다. 문화가 국제정치의 주체로서의 자격 문제, 그리고 주체로서의 지위를 결정해 왔다는 점은 다양성이 강화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위신(prestige)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치에 더욱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 소통과 패권창성 수단으로서의 문화

가치가 국제관계의 코드로 자리매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생성, 유통, 접근, 이용과 관련하여 누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상호 소통할 것인가가 국제관계에서의 역할 강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양성으로 점철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상호 소통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통이라는 측면은 호혜와 교환이라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만, 누가 소통을 통제하느냐와 관련해 권력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이동연 2006, 68-69). 소통의 외연이 넓어진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는 교류의 확대를 의미하며 기존의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시공간이 응축된 글로벌 네트워크 하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이해(interest)를 나타내고, 수렴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고, 그 수단으로서의 문화간 소통의 문제,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문화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다. 소통의 기제로서 문화는 문화의 상호성을 전제한 것으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의 국제정치는 불특정 다수의 나라들 간에 존재하는 가치를 둘러싼 힘의 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의 문화가 매력적이라면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고 공간 전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규정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온라인 공론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치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경제적 삶의 향상과 같은 물질적 욕망 못지않게 자아실현, 자유, 양성평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탈물질적 가치의 정치’(politics of post-materialist value)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탈물질적 가치인 문화와 가치의 확산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다.

문화와 가치의 확산을 위한 수단은 전통적으로 ‘홍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홍보가 발신에 중심을 두었던 반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는 시민, NGO 등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발신과 수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점은 홍보라는 것이 단순한 선전에 머물러 있다면 상대방의 반발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발신 주체(정부, 지방단체, 일반 시민, NGO 등)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Nye 2004). 특히 민주주의, 테러, 환경, 에너지 문제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가치의 대두는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주체들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 네트워크, 조직 간 네트워크, 개인과 개인의 네트워크 등 중층적인 특성을 지닌 국제정치 하에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환경,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해결을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커넥터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이를 위해서는 가치 실현 도의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가치 실현의 도의성 제시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이념과 문화의 영향력에 근거한 소프트파워뿐만 아니라, 대화와 설득, 발신 등과 관련된 워드파워(word power), 그리고 문화의 품격(cultural decency) 등 이미지 확산과 관련한 이미지 파워(image power)이다.

지금까지 국가이미지 형성에 있어서는 전통문화, 민족성, 문학작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품 등이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의 도시중간층 증가에 따른 문화와 가치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문화정보의 범람은 문화를 무국적화 시킴으로써 국가이미지 형성을 위한 도구로서 일원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자국의 문화가 차지했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성이라는 측면은 오히려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지’와 ‘전통과 현재의 공존 시스템’을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재구축할 수 있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민주주의 구축과 발전, 동양과 서양의 공존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시스템, 그리고 드라마, 음악, 패션, 영화 등 국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문화적 상품의 재구축을 통한 국가이미지 형성은 자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상품의 재구축은 획일적이며 고정적인 것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이문화와의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반영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국가이미지와 관련해 문화의 재구축이 물질적 측면이라면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행동적 측면에서의 워드파워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워드파워는 각국의 수뇌, 각료 등의 외교 교섭력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발신되는 연설의 설득력, 그리고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지식인, 문화인 등이 행하는 대화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신뢰성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田中 2000). 그리고 신뢰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에 대한 품격이 공인되는 것이 요구된다.

품격은 문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미지에 근거하는 것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국은 워드파워의 기초가 되는 문화의 품격을 고양시키기 위해 자문화 발신과 이문화 수용, 이민커뮤니티(Diaspora)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을 중요시하게 된다.

특히 세계화는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국경을 초월한 정보이동을 증가시켜 타 문화·문명 간 접촉의 기회와 함께 마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점은 글로벌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흐름의 부작용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의 정보 재생산이 확대될 경우 이문화간 공생을 저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정된 국제사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뿐만 아니라 워드파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제 4 장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디지털 컨버전스와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 그리고 그 속에서의 행위자들인 국가와 국제사회, 개인과 집단 등의 관계를 고찰하다 보면 불교의 화엄경에 등장하는 인드라망이 연상된다. 인드라망은 제석천이 사는 도리천 세계의 하늘을 뒤덮은 그물을 지칭하는데, 이 그물의 모든 매듭에는 구슬이 달려 있고 그 구슬 모두에는 사바세계 전체가 비추어진다고 한다. 그물 매듭의 구슬이 세계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이유는 세계의 모두가 하나의 그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즉(卽)하고 의(依)하여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인 세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신용국 2003).

원인과 결과가 무한히 연속되어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별개일 수 없는 네트워크의 세계는 인드라망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하다. 유사 이래 인류는 마치 스스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해온 듯 생각해 왔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연결되어있으며 서로 비추고 있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실 돌이켜보면 네트워크는 21세기 사회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 조직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네트워크는 모든 종류의 생명에서 찾을 수 있는 존재양태이다. 카프라(Fritjof Capra)가 저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모든 생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우리가 생명을 볼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네트워크를 보게 된다(Capra 2002, 9).” 사회 네트워크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심에 있는 사회 네트워크의 역동성과 의미의 생산을 조사해 왔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하게 했다(Monge and Contractor 2003). 게다가 사회구조라는 의미에서 보면, 고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역사기록에 의거하여 수 천년 전 지구상 몇몇 가장 선진적인 고대 문명에서 사회의 중추로서 네트워크가 적합하게 편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켜 준다(Castells 2004. 4).

이처럼 네트워크 사회를 상존해온 것, 혹은 다른 의미에서 인드라망이라고 해석한다면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인드라망을 가능케 하는 커넥터, 혹은 기술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는 개인과 전체, 전체와 개인이 결코 별개의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체로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유기적 전체성은 세계정치를 하나의 틀 속에서 파악하게 하며, 그 틀 속에서 각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디지털 컨버전스를 매개로 하여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은 앞 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제 1 절 권력관계의 변화와 사이버 액티비즘

1. 프로슈머와 롱테일: 집단지성과 집단협동

오늘날에 이르러 IT 발달의 주요 경향은 컴퓨터·통신·방송 등의 분야가 수렴되는 소위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임은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각기 다른 기술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융합·수렴되어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복합(digital complex)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곧 복합의 수준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융합, 즉 컨버전스 단계로의 이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권력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디지털 컨버전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공간은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게 활동의 영역과 참여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사회문화 권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종이신문을 능가하는 언론권력으로 군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지는 이미 오래이며, 국가를 초월한 시민사회 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실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세력의 약진을 배경에 깔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사회적 열위자, 사회적 취향에 있어 변방으로 밀려났던 이들에게 새롭게 뭉칠 수 있는 공간과 행동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사회적 공론의 영역에 있어서의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으로 확인되어진다. 대량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기성품에 자신의 기호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산업화 시대의 소비자는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생산과정에 피드백을 넣는 프로슈머, 즉 생산자(producer)이자 동시에 소비자(consumer)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위계화 된 구조 내에서 공간의 권력을 장악한 이들로부터의 지시에 대한 일방적 수혜자였던 개체로서의 시민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스스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현하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진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사이버 공간은 효과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작동하고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고 확대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사이버공간과 디지털 컨버전스는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던 사회의 소수자가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공론의 영역에 있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사회적 공론의 영역에 있어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론 영역에 있어서의 프로슈머의 등장은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과 연계되어진다. 네트워크는 “대규모 집단협동mass collaboration”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출현을 가능케 했으며,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컨버전스의 등장은 지식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변화시켰다. 네트워크상에서의 협동은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는 바, 이러한 협동이 지식작업에 적용될 때 집단 지성의 등장을 가져온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인터넷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방형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편집 작업을 들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경우 그 편집 작업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의사만 있다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용어에 대한 해설에의 수정을 실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간

과 공간의 제한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개방된 편집과정의 뒤에는 이러한 자발적 수정의 과정을 거듭하다보면 결국에는 최선의 지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으며,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협동을 가능케 한다. 위키피디아의 경우와 같이 사이버 공간 곳곳에서 네티즌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이른바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일반인의 지혜 또는 중지를 모으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실험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협동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산발적인 다수 개인의 행위들을 통해 전혀 다른 종합적인 결과물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식추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식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그 지식의 본질적 내용을 따지기 보다는 사회의 다수가 그 지식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에 의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혹자는 이를 ‘다수결 지식의 부상’ 또는 ‘지식의 민주화’라고 부른다(김상배 2008, 21-22). 이러한 경향은 진실의 절대성을 회의하고, 진실은 역사적·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탈근대의 철학사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지식이라는 것을 어떤 절대적 진리라기 보다는 ‘간주관성에 의해 확보되어지고 인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식의 지식에의 접근방법도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는 집단지성이 새롭게 인정받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의 세상은 롱테일(long tail)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공룡의 꼬리와도 같던 미미한 존재, 이른 바 롱테일에 해당하는 존재들, 시민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던 다수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세상을 말한다. 롱테일 법칙(Anderson 2006)은 수많은 다수가 십시일반 식으로 아주 조금씩 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현상을 일컫는 데 주로 사용되며, 경영의 분야에서는 아웃소싱에 의존하던 기업이 기업 밖의 익명의 다수의 도움으로 가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집단 소싱 crowd-sourcing”이라는 개념이 신조어로 등장하게 되었다(Brabham 2008). 이러한 집단 소

싱의 개념이 비단 생산과 소비의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식생산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으로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기기에 바탕한 쌍방향적 매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이버공간에 입장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대중의 사이버공간에의 입장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기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대중의 실질적 행위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정치사회변동에 대한 논의가 가능했을까?

사이버공간에의 입장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더욱 용이해졌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수렴되는 이 시대, 디지털 컨버전스와 사이버공간은 바로 이러한 롱테일들에게 힘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가 초래한 정치적 변화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로서의 ‘롱테일’을 엮어내는 네트워킹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는 기성권력의 강화보다는 새로운 세력의 부상에 더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사이버공간이 창출하는 탈집중 환경에서 적응력을 갖추고 정보와 지식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이들은 위계적 조직보다는 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자이다. 탈집중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의 속성은 롱테일로 불리는 불특정 다수가 집합적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군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웹1.0시대를 넘어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웹2.0시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실 인터넷의 본래 정신은 네티즌 모두가 자유롭게,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이 웹의 발전에 참여하는 자율조직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자율조직 네트워크의 사례로 먼저 주목할 것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일상적 관심사나 이익을 중심으로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문제해결 또는 대중설득을 도모하는 집합행위, 이른바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의 부상이다. 이는 밑에서부터 조직되는 ‘다중(multitude)’의 일레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다중’으로서의 사이버 행동주의는 기존의 위계적 조직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며, 단

순히 IT 매체에 의존해 단발성 퍼포먼스를 벌이는 ‘참여군중(혹은 현명한 군중, smart mob)’과도 다르다. 다중으로서의 사이버 행동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무리의 관심사를 결집·확산시킴으로써 기성 권력에 대한 대항담론을 창출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사이버 행동주의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 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시애틀 시위나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 봉기 등을 들 수 있다(김상배 2008, 31~32).

물론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집단협동이라는 새로운 행위의 방식이 지배적인 문명사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집단협동과 집단지성이 전세계적 차원의 네트워크 없이는 만들어 낼 수 없었던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으며,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갈 전망이다. 다만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각국 내부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역학관계 변화는 사이버 액티비즘의 진전을 가져왔고, 이는 동시에 국제관계에 있어 전통적인 관계형성의 주체로서 작동해왔던 행위자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2. 정치, 매스미디어, 디지털 컨버전스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스미디어는 주요한 정치적 도구이자 공간으로서 작동해 왔다. 시민은 정치를 필두로 한 정보의 절대량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 얻는다. 시민의 여론은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형성되고, 시민의 정치행동은 미디어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민으로 일컬어지는 대중이 맹목적으로 미디어가 제시하는 바 대로 휩쓸려 간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에는,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 속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고 있으며, 비록 근래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소유의 집중화 추세가 미디어의 다수성을 억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통합적이고 획일적인 미

디어 제국의 완성을 강하게 방해하는 독자적 미디어는 언제 어느 시대에도 존재해 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수용자인 시민은 결코 수동적인 수신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에 반응과 역반응을 나타내는 바, 이와 같은 반응과 역반응은 각자의 지각, 가치, 이해 등에 근거한다. 따라서 미디어는 결코 대중에 대하여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며, 이와 같은 미디어의 일방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그 주체가 정치인이든 이데올로기이든 간에 전혀 예기치 않은 대중으로부터의 역습에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주류를 차지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실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류 미디어가 선택하지 않는 메시지 혹은 사실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도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나고 만다.

흔히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미디어의 역할은 정치과정에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디어에 의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는 정치관행과 정치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이 미디어에 정치활동의 모든 부분을 위임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미디어 때문에 정치활동을 덜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반대에 가까워 보인다. 미디어 노출과 정치적 관심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정통성의 위기는 어느 정도는 과거의 정치세력이 미디어를 통한 정치에 몰두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정치세력의 의도적인 정치행위로 인해 지난 수십년 동안 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화의 진원지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이는 결코 대중이 정치에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미디어는 시민과 정치지도자와의 관계에서 하향정치를 재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웹 2.0시대의 도래와 쌍방향성의 도입은 이와 같

은 일방적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며, 디지털 컨버전스는 일방성이 아닌 쌍방향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미디어에의 노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욕구 증대와 그에 따른 실질적 행위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인터넷 또한 초기의 출발점은 일방적·하향적 전달의 도구에 머물러 있었다. 인터넷이 시민과 맺는 관계에서 정치기구가 통제하는 하향 정치를 재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서만 머무르는 한, 그 부가가치는 제한적이며, 여론에 미치는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터넷은 결코 하향적 정치의 재생산의 도구로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시민 개개인, 풀뿌리 조직, 정치적 흥행주가 정치과정을 재디자인하는 자율적인 프로젝트에의 개입 등을 통하여 인터넷은 선택의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이는 자원의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다방면으로 뻗치는 개별관계를 기초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잠재력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개방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한 무한정하게 확장될 수 있다. 개방형 프로그램이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중앙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상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재발하는 과정에서 결과로 나타난 어떤 일반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의미한다(Sey and Castells 2004). 인터넷의 개방성과 네트워크 구축가능성 개방형 프로그램의 중시는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미디어와의 융합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치과정에 있어 더욱 폭발적인 파괴력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 정치의 각 부분은 디지털로의 수렴 현상에 대해 치열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네트워킹의 문화논리와 네트워크 아미(network army)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매스미디어와 네트워크의 융합, 그리고 집단지성과 집단협동이 가능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치는 어떤 양태를 띠게 될 것인가? 아니 그보다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정치를 세이(Araba Sey)와 카스텔의 의견

을 좇아 ‘기관과 조직의 정황과 상관없이 사회에서 권력관계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Sey and Castells 2004, 365). 이러한 모든 사회적 과정에서 집단지성과 집단협동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이러한 집단지성과 집단협동은 누구 혹은 무엇에 의하여 선도되어지는가?

주리스(Jeffrey S. Juris)는 ‘네트워킹의 문화논리(cultural logic of networking)’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광범위한 지도원칙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자본주의의 논리로 형성된 것인데, 이러한 지도원칙들은 행동가들에 의하여 내재화 되어지고, 구체적인 네트워킹의 관행들을 창출해낸다. 이러한 논리는 구체적으로 행위자들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하도록 하는 장착되고 구체화된 유형의 사회적·문화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 다양한 자율적인 요소들 가운데 수평적 유대와 연결을 구축하기; 둘, 정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유통; 셋, 분산된 조직을 통한 협업과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 넷, 자율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킹 등이다(Juris 2004, 342).

인터넷은 궁극적으로 자유의 기술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민사이에 확산된 인터넷은 대표성과 참여의 정치적 변환에 잠재적인 구원자로 환영을 받았다. 동시에 비판자들은 전자민주주의의 위험성에 관해 경고하고 있으며, 시민의 잠재적 파편화와 엘리트와 선동가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시민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필터링을 피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네트워크 그 자체에 대해 집단적 자율성을 주장할 것이다. 주리스는 이를 네트워킹의 문화논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공식적 정치과정을 변환시키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인터넷은 정치활동 과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논의, 정치적 선택, 정치적 대표, 정치적 의사결정을 행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빔버(Bruce Bimber)의 주장은 인터넷 효과는 개별 행동보다는 대표과정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정보의 흐름은 정치구조와 정치적 행동에 있어 핵심적이다. 정보는 정치활동가에 의해 사용되는 전략적 또는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의 도구

및 자원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특성과 우수성은 정치활동가 자신을 규정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Bimber 2003, 231).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 흐름의 방향과 콘텐츠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치활동가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집단동원의 길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토론이 발생 가능해짐으로써, 매스 미디어 시대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어졌던 정치의 무대를 변화시킬 것이다(Sey and Castells 2004, 365).

지금까지 시민들은 인터넷을 정치운동과 프로그램을 위한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는 해도 정치과정을 좀 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보 흐름의 과정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전적 정보의 흐름은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은 정보가 정치인에서 대중으로 일방통행 식으로 흐르도록 했을 뿐이다(Norris 2002; Johnson 2003; Levine 2003).

다른 한편으로 대중의 정치참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저항정치, 직접투표, 여론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방법의 사용 증대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인터넷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복잡한 이슈를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대중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지 않을지 염려하며, 이는 대중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와 같은 양 입장을 대척점에서 우리는 네트워크 아미(network army)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아미에 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비슷한 성향을 지니며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 중 하나인 헌터(Hunter 2002)는 네트워크 아미를 지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공통된 관심사에 의해 모여 특정한 주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 집단이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며 인터넷에 의해서 동원되고 공식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에 리더도 없고 협상상대도 없으며 스스로 조직

되어 말보다는 행동을 우선시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한다(Hunter 2002). 이들은 IT 매체를 단순 도구로서 사용하는 현명한 군중과 구별되며, 밑에서부터 조직되는 다중에 속한다. 전술한 사이버 행동주의를 가능케 하는 집단지성과 집단협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집단으로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아미는 누구의 지시도 없고, 어떠한 대척상대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역동성으로 작동함으로써 집단지성과 집단협동의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려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행위자와 정치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아미의 존재는 정보전달의 일방향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교육받지 못하고 목적성 없는 다수에 의한 오도(誤導)의 우려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물론 대중을 통한 전체적 동원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네트워크 아미와 사이버 액티비즘은 반드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무대에 있어서 전통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킨다.

제 2 절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가 역할

세계화는 디지털 컨버전스 그리고 사이버공간과 결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뛰어넘는 영역의 확장을 가져온다. 새로이 창출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포괄하는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등장은 정치사회적 행위자들의 제도적 상호연계와 정치순환의 여러 단계를 통한 국가 영역을 넘어선 협력을 가져왔다. 네트워크화된 세상 속에서의 다층 거버넌스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에 집중하게 한다. 국가는 여전히 통합체계에서 강력한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초국가적 협력의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층 거버넌스 하에서 세계정치질서와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은 국가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내적 행위자와 초국가적 행위

자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국가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정부행위자 이외에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현대 국민국가는 사회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의 상호연계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실행에 있어서 집단적·협력적 행위자들의 영향력에 강하게 영향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변화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독점적 권력 분산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그에 따라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정부의 결정권한을 초국가 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할 것인가? 아니면 초국적 기업과 이익집단의 영향력 강화가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인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민집단의 연대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얼마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결국 국가의 역할은 국가 스스로의 위치매기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위치매기기는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1. 디지털 컨버전스와 국가 개념의 변화

국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을 달리해왔다. 인류가 등장하고 사회가 존재한 이래 등장한 국가의 모습을 살펴보면 도시국가, 고대국가, 중세국가, 근대의 국민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보여 왔다. 국가의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할 때 현대의 주류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국가라는 것도 보편적 국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의 무대에 있어 영원한 지배적 존재일 듯이 간주되었던 국민국가라는 것은 사실 서구의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출현한 국가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국민국가는 영토적 경계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국민·민족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공동체를 활동배경으로 하면서 부강의 목표를 추구하던 국가의 근대적 형태로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국민국가도 20세기 중후반 이래 그 형태와 기능의 변환을 경험하고 있다.

비물질적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초국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영토적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이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국민·민족 차원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국가의 형태와 기능도 변환된다. 그렇다고 국가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국민·민족을 넘어서 네트워크라는 좀 더 확장된 사회적 공간 속으로 스며들면서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다(김상배 2006, 524).

제조정된 국가는 근대 이래 유지해 왔던 국제정치의 무대에서의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서의 위치에서 내려와 네트워크 속에서의 여러 행위자들 중의 하나로서 작동하게 된다. 국민국가 속에서의 국민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의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이겠지만, 국가가 영위하고 있던 절대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이 네트워크 사회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약화된 국가 역할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행위자들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한다. 개인과 집단, 초국적 기업과 세계시민사회운동, 비국가행위자들과 같은 새로이 주목 받기 시작한 행위자들은 네트워크라는 좀 더 확장된 사회적 공간 속에서 국가와 동등한 위치를 누리거나, 오히려 국가를 넘어서는 포괄적 연대감과 정체성을 구축하기까지 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속한 개별 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약화시키는 역할 마저 수행한다.

2. 네트워크 정체성과 초국적 연대

근대적 국민국가의 역할 조정과 전지구화는 지역의 사회운동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확장시키고 전세계의 사회운동조직과 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초국적 공론장을 형성시킨다. 초국적 공론장의 형성은 역으로 지역·국가 내의 사회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지역 정부와 국가에 대해 유용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국내·지역의 쟁점을 국제화시키거나 국제적인 관심사나 이슈를 국내로 수용하여 운동차원에서 이슈화시켜 지역과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를 강

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형성은 직접적인 행위에 앞서 공통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전체적인 틀의 조정(frame alignment)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가 단기적 존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형성되어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할 때 지역운동이 강화될 수 있고 운동의 전략은 보다 성숙해지고 운동단체의 책임성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임현진 2003).

이는 인간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이 관계로부터 자아 정체성을 부여 받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견해도 자신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사람들의 이념이나 정체성은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범주를 공유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중요한 사회적 성격을 공유한 집단이라는 것을 상호 인식하게 되고, 공통의 이해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Polleta and Japer 2001).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 후에야 자신이 속한 집단과 집합적 이해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게 된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이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이것이 관계에 자리 매겨진(embedded) 인간 모습의 핵심이다(김용학 · 하재경 2009, 76).

따라서 네트워크 사회는 모든 정황에서 어떤 기본적인고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면서도 그 사회가 진화하는 문화적 · 제도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를 띤다. 현재의 네트워크 사회는 그 구조가 마이크로 전자 기반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진법 논리, 즉 포함 혹은 배제의 논리로 작동한다. 따라서 집단화와 파편화는 현존하는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권에 속해 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사실 포함 혹은 배제의 논리는 일면 매우 극단적이다. 모두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포함 혹은 배제의 논리를 사회의 각 영역으로 확산시켜보자. 정치와 권력, 노동과 생산의 영역에 있어 노동의 경우 자체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노동과 그렇지 못한 노동으로, 정치의 경우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권력의 경우 소지자와 비소지자로 분화되어 이진법 논리의 작동을 보여줄 것

이다. 포함의 영역에 속하는 프로그램 노동자와 정치의 참여자 및 권력의 소지자는 가치창조자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질서구축의 주축이 되어 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작동할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 즉 배제의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포함 혹은 배제의 과정에 있어 디지털이 다름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름을 더욱 단순화 시키는 도구로서 작동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이 진정한 의미에서 쌍방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사이버공간은 진정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는가?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디지털이 진정 디지털이지 못했기 때문? 아니면 디지털로의 수렴에 실패했기 때문? 그렇다면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로의 수렴이 지금까지의 포함 혹은 배제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렴을 통한 새로운 통합을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사이버공간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집단활동보다 파편화된 개인의 확산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가능케 한다. 오프라인의 세상을 벗어난 온라인의 세상에서, 모두는 모두에게 접속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접속의 다른 한편에는 오프라인의 세상에서 모두로부터 소외되어 고립된 온라인에서의 접속만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존재로서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새로운 모델에의 적응과정이 늦어져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과정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하향식 정보의 전달에 적합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한 통제를 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부가가치가 상호작용과 자율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해도, 메시지의 통제에 기초를 두고, 대의기관과 행정기관들에 대한 접속을 제어하는 정치시스템은 이 매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정치과정이 시민 자율성의 구축에 기초를 두면 들수록 인터넷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정치적 동원과 영향을 증대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 증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네트워크 속에서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면 할수록, 국가에의 소속감은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보가 제시하는 세계정치의 무대는 이전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미디어는 하향적 정보전달의 도구로서 작동되기 힘들어질 것이고, 국제관계에 국내정치가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사회운동으로서의 초국적 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연대에 있어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 또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글로벌 사회운동의 확대와 네트워크 시대 세계정치질서

‘시애틀의 투쟁Battle in Seattle’은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눈앞에 둔 1999년 11월 30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담을 저지시킨 ‘글로벌 사회운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새로운 ‘밀레니엄 무역라운드’의 출범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시애틀 WTO 각료회담은 세계 각 지역에서 온 5만여 활동가의 조직적 반대 투쟁으로 개막식도 치르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시애틀의 투쟁 이후 국경을 넘는 사회운동은 규모와 범위, 조직구조, 동원양식, 대안규범 등의 측면에서 이전의 초국가 사회운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 사회운동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추구했으나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일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변화를 주창하는 NGO 중심의 네트워크(NGO Advocacy Network) 형태를 띠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의 무대 안에 머물러 있었고, 지리적·정치적 경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조현석 2008, 283).

시애틀의 투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글로벌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세력과 학생 청년운동 같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세력 뿐 아니라 환경, 인권, 여성, 반전 등 다양한 이슈에 몰입한 국제 NGO 심지어 개인 활동가까지 포함하는 지구적 규모로의 확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사회운동은 조직구조에 있어서도 다중심적이고 분산적인 전형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운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중의 동원 양식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시위 같은 전통적 동원 방법 뿐 아니라 네트 스트라이크, 온라인 청원, 메일 폭탄 같은 새로운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운동은 그 지향점에 있어서도 훨씬 더 포괄적 성향을 띤다. 다수의 대중을 한 틀 안에 포괄하기 위해 그 표방하는 가치로서 글로벌 사회정의(global social justice)와 같이 광범하고 포괄적인 것을 내세운다. 이는 다양한 이슈와 이질적인 세력을 하나의 운동세력 안에 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유연한 정체성이야말로 서로 다른 이념과 이슈를 내세우는 다양한 NGO 조직과 운동세력을 하나의 틀 속에 결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사회운동의 형성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의 규모변환(scale shift)이 작동한 결과 초국가 운동의 새로운 형태, 즉 글로벌 사회운동이 출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혁명이 지구적 범위에서 작동하는 정보자본주의와 네트워크 국가를 등장시켰듯이 사회운동의 전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사회운동이 지역적·문화적 제약을 넘어 글로벌한 규모로 전개되게 된 것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이버공간의 활성화에 기반하고 있다. 1999년 11월 시애틀의 투쟁, 2001년 7월 제노아 사회포럼과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2002년 스타벅스 커피 반대 운동 등은 이러한 글로벌 사회 운동의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사회운동은 1990년대 세계화와 정보혁명을 배경으로 크게 성장했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탈중심적이고 분산적인 조직모델, 다양한 이념과 집단을 포용하는 유연한 정체성, 직접행동을 중시하는 적극적 행동 전략 등에서 이전의 초국가 사회

운동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사회운동의 조직적·이념적 특징은 인터넷 시대 사회운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사회운동의 변화는 세계정치의 전개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세계정치의 무대에 있어 전통적 행위자인 국가는 글로벌 사회운동의 확산과 함께 그 중심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에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통합된 하나의 세력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운동이 글로벌한 범위에서 네트워크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운동 네트워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유연하게 조직함으로써 동원 능력을 극대화시켜 왔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적·군사적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나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와 같은 글로벌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사회 운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미시적으로도 사회운동조직은 국제 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 기업처럼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기회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운동세력은 국가나 국제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세에 놓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이슈의 경우 기업이나 국가의 행동과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데 사회운동 세력이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회운동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특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대인지뢰 국제조약에 가입하도록 NGO가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사회운동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구조적 권력과는 다른 일종의 틈새권력(interstitial power)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이러한 틈새권력의 행사가 제도화되고 지속적일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사회운동의 제도화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사회운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와 같은 집단지성, 집단협동의 움직임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움직임들을 방해하고 거부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지구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는 틈새권력의 행사를 제도화하고 지속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틈새권력에 편승함으로써 국가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받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똑 같은 집단에 의한 똑 같은 사안에의 영향력 행사가 전혀 다른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시대 다양성에 기초한 정치질서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시대 정치질서의 특징은 아래의 <표 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1> 네트워크 시대 정치질서의 특징

구분	네트워크 이전 시대	네트워크시대
행위자 및 정치적 권위의 형식	국민국가/국가 간 블록화	국민국가, 초국가적 단체(다국적기업, NGO, 세계시민사회그룹 등), 네트워크 아미/글로벌 거버넌스
권리의 유형	국민국가 내의 권리	권리의 전지구적 확장
전지구적 수준에서 합법적 강제의 형식	전쟁, 냉전, 제국주의	세계정치 내에서의 관계 및 국제법 강조
시민사회의 정의	국가, 자본과 구분되는 영역	초국적인 자율적 결사체와 제도들

(윤민재 2007, 237의 표를 변형)

제 3 절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공외교

세계정치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사회운동의 확대, 국가역할의 변화는 외교의 영역에서도 대중의 참여가능성을 확대시킨다. 디지털 컨버전스와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외교의 내용과 형식을 양적·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근대외교의 기본전제들을

변화시켰다.

21세기의 정보화는 단순히 경제산업적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질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는 선도적 위치에 있음은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본격적 도래 이전까지는 각 국가들이 국가적 부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정보화에 몰입하였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역으로 형성되어 정보화와 디지털 컨버전스의 작동양태가 국가들로 구성된 기존 국제체제의 기본성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은 종래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가 갖는 세계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주권적·영토적 사회구성체의 대표로서의 국가가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아니, 굳이 외교의 수행자를 국가로 한정시킨다는 것이 이미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컨버전스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도 모른다. 네트워크화된 세상,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서의 외교는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할 수밖에 없고, 공공외교는 이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되어진다.

1. 네트워크 사회와 공공외교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전통적 의미의 공공외교는 자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대방 국가의 내부 구성원을 향한 매력의 전파 정도로 풀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카(E. H. Carr)는 일찍이 ‘의견을 장악하는 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하며, 군사력 및 경제력과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Carr 1983). 나이(Joseph S. Nye)의 말을 빌리자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탈근대 국제관계에서 매력적인 국가는 국제적 쟁점을 설정할 수 있고, 지배적 국제규범에 가까운 문화와 생

각을 가졌으며, 이들 국가의 가치와 정책으로 자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나의 주장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Nye 2004). 의견을 장악하는 힘의 탈근대적 변형인 소프트 파워가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다수의 초국경적 고리로 연결된 오늘날의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소프트 파워를 상실하는 것은 하드 파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져서 이제는 진부하기까지 하다.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화의 심화는 시장과 국가 간에 복잡한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과 분할(fragmentation) 현상을 불러 일으켰으며(Rosenau 2003), 국제 정치의 무대에 있어 행위자의 다양화는 문제해결의 방식을 네트워크적으로 만들었다. 상호의존과 분할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시장 등 단위체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각 단위체는 분리될 수 없는 연속적이면서 구분된 연계(linkages)를 지니게 된다(Ansell & Weber 1999).

네트워크적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이익과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행위자는 국가보다는 다국적 기업이나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이다. 정보사회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초국적인 생산과 금융의 네트워크를 수립한 다국적 기업들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세계시민사회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보다 더 우호적이다.

기실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이전, 특히 냉전시대의 정책 결정자는 국가안보가 우선시되는 외교정책의 결정에 있어 국내적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미국과 같이 고도의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조차 외교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특권’(prerogative power)으로 간주되어 대통령제는 ‘이원적 대통령제’라고 운위되기도 했다(Spanier and Uslaner 1989).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기업과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이 득세하고 있는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비정부행위자들과 시민사회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국제정치무

대에서 직업외교관이 전권을 가지고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이제 매우 드문 일이 되었다. 외교적 협상의 무대는 시시각각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지켜보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실시간으로 쏟아낸다. 여론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게 된 21세기의 외교는 여론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공공외교의 강화이다. 자국은 물론 타국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행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Leonard 2002; 전채성 2006).

공공외교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이 국가행위자를 중심에 위치시킨 것이라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공공외교는 국가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하에서의 공공외교는 단지 국가가 자국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타국을 상대로 펼치는 마케팅적 의미에서의 외교가 아니라, 펼쳐진 관계의 망 속에서 각각의 개체적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성해 나아가는 포괄적 문제해결 외교의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러한 개체적 구성원들의 외교적 역량을 담보하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줄 것이다.

2. 유유상종과 상전이

공공외교는 어떠한 방향성을 담보해야 하는가? 상호구성적 공공외교의 작동을 새로운 세기의 외교의 모습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는 유유상종과 상전이 효과의 극대화라는 특징에 의해 작동한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전이란 무엇인가? 임계성을 갖는 물질이나 시스템은 고유한 임계값에 도달하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급작스러운 전이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가장 흔히 쓰이는 예로, 물은 0℃에서 액체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급전환하고 100℃에서 증기로 형태가 변화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상전이라 부른다. 이러한 상전이 현상은 점진적 변화, 혹은 양적 변화라기 보다는 급진적 변화이며 특히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자연과학에서 다루어져 온 물리·화학적 상전이는 이

제 사회현상에서도 적용되어 유사한 현상을 포착하게 되었다. 복잡계 이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속한 사회 네트워크의 구조를 통해서 상전이(相轉)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금융시장이 급격히 몰락하거나 개봉된 영화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사회현상에서 실제로 상전이가 발생하는 구체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단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그 메커니즘을 보여줄 뿐이다(Watts 2003).

인터넷 상전이는 특정한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의 과정에서는 특정한 임계점만 지나면 정보가 포화상태로 확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 상전이는 의도된 행위의 연쇄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아무런 계획과 의도 없이 나타나는 현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김용학·하재경 2009, 171).

이처럼 네트워크 속에서의 상전이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 하고 그 위험성은 높지만, 일단 임계점에 도달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외교의 모습은 세계정치 무대에 있어 이와 같은 상전이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상호 구성적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가는 공공외교의 주도적 행위자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행위자들에게 무대와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민에게 온전히 위임한 공공외교의 파급력이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의 파급력보다 더욱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국민에 의한 공공외교의 파급력이 강력한가? 자연세계와 사회세계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매우 좁은 세상이며, 또 그 안의 노드들은 연결선을 매우 불평등한 상태로 나누어 갖고 있으며, 또 끼리끼리 모이는 군집화의 정도가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이 특징이 대규모 집단협동이 파괴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들불처럼 퍼져 나갈 수 있는 상전이의 조건이 된다. 네트워크는 무작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리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연결되는 유유상종(homophily)의 원리와 더 많은 연결선을 가진 것에 연결되

는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의 원리이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가 네트워크의 군집성향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허브가 존재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김용학 · 하재경 2009, 15-16).

머튼(Robert King Merton)은 연결이 생성되는 미시적 과정에서 생기는 확장의 효과에 대하여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태복음, 25장 29절)”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과학분야에서 인용을 많이 받는 학자가 더욱 많이 인용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마태효과라고 불렀다(Merton 1968). 이러한 예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질성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증대될수록,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규모가 되어야 그 이후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외교에서의 국가역할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전통적 의미에서의 공공외교는 ‘자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대방 국가의 내부구성원을 향한 매력의 전파’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매력 발신의 조정자요 중심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상전이와 유유상종의 원리가 작동하는 네트워크의 세상에서 국가는 매력 발신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상호구성에 의한 매력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네트워크 아미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상의 집단적 활동자들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는 국가에의 귀속감보다 네트워크 아미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는 활동자들 또한 존재하지만, 동시에 국가에의 귀속감을 여전히 강하게 갖는 활동자들 또한 존재한다. 공공외교의 일차적 목적성이 국가이미지의 향상과 이에 따른 국격의 고양이라고 간주한다면, 발신된 국가이미지가 긍정적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이러한 발신의 중심에 국가행위자가 위치하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귀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행위자들이 매력 발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서 국가는 발신 중심자의 역할 보다는 매력 발신의 개체들을 연결하는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예측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3.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상호작용으로서의 공공외교

현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는 기존의 발전국가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연상시키는 일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를 마치 마케팅으로 여기는 듯하다 (Ham 2008; Martin 2007; Snow 2009). 공공외교는 마케팅이 아니며, 이점에서 많은 국가들은 착각하고 있다. 많은 걸 보여주어야 많은 걸 얻는다고 생각한다.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같은 구호에 집착한다면 공공외교의 본질로부터 한참을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외교는 판매나 협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며, 상호교통이며, 교환이다. 향후 각국의 공공외교는 이러한 인식 하에 지식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 차원의 문화네트워크를 엮어내는 매력의 공식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 주체는 국가가 아닌 절대다수의 대중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파의 주체는 대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외교의 작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국은 ‘자국 국가목표의 수월한 달성을 위한 공공외교의 강화’와 같은 외교적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전통적 공공외교의 궁극적 목적이 상대방 국가 내부에 자국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시켜 자국의 국가목표를 더욱 수월히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공공외교의 모습은 매력의 상호구성을 통해 집단협동의 가능성을 증가 시킴으로써 전지구적 문제의 공통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공공과 외교의 문제가 <표 4-2>에 제시되고 있는 것 처럼 서로 대립적 성향을 띠는 것이었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새로운 공공외교의 추진은 디지털을 통한 공공과 외교의 진정한 수렴을 바탕으로 매력의 상호구성과 전지구적 문제해결 가능성의 향상이라는 전혀 새로운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4-2〉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한 공공과 외교의 대비적 정향의 통합

공공(Public)		외교(Diplomacy)
비정부적 행위 → 개인 행위자들 → 비공식적 →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대중 →	공공과 외교의 통합을 통한 상호 구성으로서의 공공외교의 작동	← 정부적 행위 ← 외교문제 전문가들 ← 공식적, 조심스러움, 과학적 ← 수동적 참여자로서의 대중 혹은 청중
상호 이해 →		← 이해의 전달
문답적이고 교환적 → 양방향 대칭 → 행태 변화 있음 →		← 일방적 정보전달 ← 양방향 비대칭 ← 행태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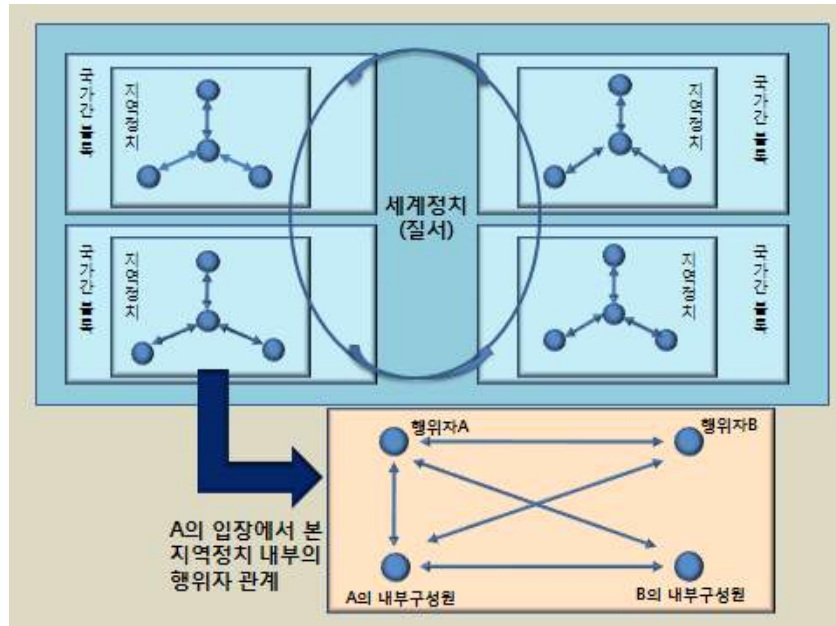
(Snow 2009, 8의 도표를 재구성하였음)

네트워크 사회의 확산은 전지구화의 발전과 그 흐름을 같이 해 왔다. 정치적 측면에서 전지구화는 국가중심적 정치에서 매우 복잡적이며 다층화된 전지구화의 정치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전지구화의 정치는 세계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적 권위와 통제의 기제가 접합되고 맞물려 있는 구도 속에서 출현한다. 그 결과 세계질서는 국가간 체계가 다층화된 지역적·전지구적 통치구조의 체계 속에 배태되어 있는 매우 복잡적이고 상호 연관된 질서의 모습을 띠게 된다(Held and McGrew 2002, 130). 이러한 세계정치 무대에서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그림 4-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4-1)은 세계정치의 무대에서 행위자들의 역학관계를 나타낸다. 각 행위자는 국가 간 블록에 속해서 지역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국가 간 블록들은 세계정치질서라는 포괄적 구조 하에서 체계에 의한 영향을 받고 또한 상호작용한다. 지역정치 내부의 행위자들을 들여다볼 때 각 행위자는 개인, 초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그룹, 국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각 행위자가 복수의 집합일 경우에는 그 내부구성원들을 가지며, 이러한 내부구성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림 4-1)의 가장 아래쪽 작은 네모의 그림은 A의 입장에서 본 지역정치 내부의 행위자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A가 A의 내부

구성원들과 행위자 B, 그리고 행위자 B의 내부구성원들과 주고 받는 영향력의 행사와 상호작용의 모습은 그 주된 행위자를 B, C, D...N으로 변화시켰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그림 4-1]의 아래쪽 네모의 그림은 [그림 4-1]의 위쪽 가장 작은 네모 안의 상호작용하는 네 개의 원들을 각 행위자 A, B, C, D라고 했을 때 그 각자의 상호작용을 A의 입장에서 대표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1] 세계정치 무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결국 위의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화된 세상에서 국가는 주된 행위자로서의 위상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정치의 무대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관계의 무대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그 내부적 구성원들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5 장 결 론

네트워크 사회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1991년 발간된 『네트워크 사회』(De netwerkmaatschappij/The Network Society: Social Aspects of New Media)의 저자인 반다이크(Jan A. G. M. van Dijk)이지만, 네트워크 사회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카스텔(Manuel Castells)의 영향이 크다. 카스텔은 네트워크 사회란 “핵심적 사회구조와 행위들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정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즉,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네트워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매우 오래된 형태의 사회조직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핵심은 극소 전자 기술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사회관계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그는 네트워크 사회를 사회관계망과 기술적 네트워크의 결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란 정보통신 기술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조직되며 사람들이 사고하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각 행위자 혹은 각각의 무대는 다른 행위자 혹은 무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 연결 속에서 총체적인 하나의 결과를 파생시키며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사회의 각 영역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엮이고 이질적인 분야들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통합되고 심지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역과 세계가 통합되어 가는 힘이야말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추동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인관관계망 형성에는 소통의 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사회 구성원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결합 혹은 접합의 방식 또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집단의 분화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들 사이의 새로운 결합 및 재구성 등 유동적이고 이질적인 인간관계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융합 환경의 발전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사회영역 뿐

만 아니라 국내 정치영역과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 환경이 인간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과 더불어 국내공공영역과 글로벌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변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을 상호동조와 차별화라는 이중적 양상의 표출로 파악했다. 또한 공간적·시간적 영역을 초월한 관계망을 형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국제관계에서 권력의 핵심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가 국가의 국제관계 설정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두된 글로벌 공공외교의 확대 가능성을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 포괄하려고 시도하였다.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인쇄물의 전파에 의해 창조된 세계를 구텐베르크 은하계(Gutenberg Galaxy)라고 이름 붙였듯이, 카스텔은 인터넷에 의해 열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광대한 지평을 인터넷 은하계(the Internet Galaxy)라고 이름 붙였다(Castells 2001). 이 새로운 은하계에서 내부와 외부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격차의 간극이 줄어들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접속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정보격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접속된 자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서구지역에서조차 모든 사람들이 격차 없이 접속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기술적 발달에 의한 비용의 감소를 필요로 한다. 전세계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의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지만, 그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식의 생산과 소비는 이전 시대와는 확실히 구별된다. 하나의 매체에서 놀이와 일이 번갈아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벌어지는 시대에는 놀이와 노동에 시공간적 경계를 긋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노동을 통제하는 것 또한 무의미해진다(김용학·하재경 2009, 43). 특히 지식이나 정보를 생산하는 노동은 일반 재화의 생산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갖는다. 상품은 소비하면

없어지지만, 지식은 소비해도 남아 있다. 더욱이 지식은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 공개된 지식에 자신의 영감을 덧붙여 더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 제품에 다른 제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우나, 지식에 새 지식을 더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지식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거대하고 복잡한 지식체계로 재편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설정한 전통적 학문의 경계를 넘어 물리학과 사회학이 만나고, 생물학과 공학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식혁명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진행되면서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이 가진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식 반감기라고 한다면, 이 반감기는 지식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점점 단축되고, 지금 이 시간 발견된 지식은 그 순간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네트워크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고, 생산 활동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노동 통제보다 창의성이 중요시 되면서 사회는 대규모 변동을 겪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수직적으로 배열된 기존의 권력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때로는 역전시키기도 하는 권력이동(power shift) 현상이 거대한 추세를 이룬다. 한편 또 다른 거시적 변화는 네트워크 자체가 가치나 부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권력이동 현상을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추세라고 제일 먼저 주장한 토플러는 권력의 근원인 폭력, 부, 그리고 지식의 삼자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그 중심축이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한다(Toffler 1991).

카스텔은 비슷한 맥락에서 권력의 편재화를 이야기했다. “권력은 왕과 귀족과 지배계급의 손에 있었다.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여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었었다. 이러한 권력개념은 더 이상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권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어디에도 편재한다. 그것은 대량 생산체제 안에, 금융의 흐름 안에, 병원과 학교에, 텔레비전 안에, 이미지 안에, 테크놀로지 안에 있다(Castells 2004).”

권력은 지식이며,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권위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날의 권력은 편재해 있다는 카스텔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근대사회의 기본적 사회구성체로서의 국가가 갖는 위상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획득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외교의 영역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대로 확대 적용되어진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나타나는 정치적 변화는 ‘이슈의 다양화,’ ‘의제의 다양화’에 따른 소집단 동원체제, ‘전지구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정치의 융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어떻게 다양한 이슈들을 조절하고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힘(power)의 원천으로 작동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네트워크의 시대에 통제 대신 부각되는 것은 동조화(synchronization)이다. 이는 말 그대로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마치 물결이 퍼지듯 같이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동조화의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지휘자가 없는 가운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자유로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지만, 잠시만 지나면 이들의 박수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수렴되어가는 모습이 한 예다. 세계정치 또한 매력의 상호구성을 통하여 이렇게 수렴되어 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의 그 어느 기관도 심장이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뛰도록 명령하지 않는지만,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이 동시에 전기를 발사하는 동조화의 원리에 의해 심장의 펌프질은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고 있다(Strogatz 2003).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제의 구분이 없고, 국가와 초국가적 행위자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네트워크의 세상에서는 세계정치의 모습이 이와 같은 수렴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며, 초기의 국제정치 체계이론가들이 상정했던 단일한 유기체적 특성을 갖는 세계체제 혹은 세계정치질서의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보가 사방에서 순식간에 물밀듯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정보의 폭포라고 표현하곤 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들의 과거 행적, 생각, 편견 등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른 개인으로부터도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Watts 2003)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도를 떠나 네트워크 아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외교는 행위자 상호간의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매력의 구성과 전지구적 문제들의 해결에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집단협동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요한 가치 창출의 방법으로서 파악되어 진다. 기업의 몸집을 부풀려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위계적 기업을 1세대라 이름 붙인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유연성을 획득하는 기업을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아웃소싱이 특정한 기업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일을 맡기는 것인 반면, 제3세대 기업은 인터넷에 연결된 불특정 다수에게 가치 생산을 맡기는 방식을 택한다(Anthony, Johnson and Sinfield 2008).

국가역할, 정책과 외교의 문제를 같은 틀 안에서 파악해 보면, 근대를 지배했던 민족국가 초기의 모습이 민족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국가의 이득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반면에 냉전 시대의 국가는 폐쇄된 블록 안에서 문제해결 전략과 그룹 짓기를 통해 국가의 생존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탈냉전과 네트워크 시대의 민족국가는 민족의 틀을 벗어던지고 열린 연결망의 이름의 다수에게 의존하는 집단소싱 혹은 열린 혁신 전략을 택함으로써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물론 대중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교육받지 못한 다수에 의한 횡포가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대중의 현명함을 높이 살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정책적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세상은 한없이 좁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를 더욱 좁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으로서의 공공외교는 멀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마케팅적 마인드에서의 타국에 대한 자국의 매력전파나, 국가이미지의 향상, 호감을 사기위한 ODA의 지원이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 대

한 교육과 정체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향은 네트워크 사회가 가져오는 필연적 변화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네트워크 사회의 확산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자에서 주변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흔히 복잡계로 일컬어지는 네트워크 사회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통제불가능성, 혹은 통제의 축소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적으로 지구상 어떤 나라도 타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자적 정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온전히 자국의 이득만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기대한 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 목표는 이와 같은 복잡계를 통제하는데 맞추어지기 보다는, 통제불가능성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회피하는데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방성의 원칙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기업이 오픈소스와 외부수주를 통하여 기업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듯이, 국가가 산적한 문제들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해결해 나가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외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집단지성의 도움을 얻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오히려 문제가 개방될 때 더욱 많은 창의적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고, 정보의 공개는 책임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이 대중의 현명함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전체적 격차의 축소는 집단지성의 현명함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Anderosn, Benedict.(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白石さ・白石隆 譯.(1997). 『増補 想像の共同体—ナショナリズムの起源と流行』. NTT出版.)
- Anderson, Chris.(2006). *The long tail: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elling less of more*. New York: Hyperion.
-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1999).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0, No. 1.
- Anthony, Scott D., Mark W. Johnson, and Joseph V. Sinfield.(2008). “Institutionalizing Innova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9.
- Arendt, Hannah.(1959). *The Human Con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78). *The Life of the Mind*. San Diego, New York, and London.
- Brabham, Daren C.(2008). “Crowdsourcing as a Model for Problem Solving: An Introduction and Cas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14. 75~90.
- Braman, Sandra. ed.(2004). *The Emergent Global Information Policy Regi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apra, Fritjof.(2002). *Hidden Connections: Integrating the Biological, Cognitive, and Social Dimensions of Life into a Science of Sustainability*. New York: Random House.
- Carr, E. H.(1983).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Basingstoke: Macmillan.

- Castells, Manuel.(2001). *The Internet Galaxy*.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orthampton, Mas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Crack, Angela M.(2007). “Transcending Borders Reassessing Public Spheres in a Networked World.” *Globalizations*, Vol. 4, No. 3, p.341.
- Castells, Mauel.(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 _____.(2004).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 _____.(2008). “The New Public Sphere: Global Civil Society, Communication Networks, and Global Governan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p.89.
- Comor, Edward A.(1999). “Governance and the Nation-State in a Knowledge-based Political Economy.” Martin Hewson and Timothy J. Sinclair. eds. *Approaches to Global Governance Theory*. New York: New York State University Press.
- Grewal, David Singh.(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Florida, Richard.(2005). “The World is Spiky.” *Atlantic Monthly*, October.
- Friedman, Tomas L.(2005).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t. Martin Press.
- Ham, P.(2008). “Place Branding: The State of the Ar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No. 1.
- Held, D, McGrew, D. Gldblatt, J. Perraton.(1999). *Global Transform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ld, David and Anthony Mcgrew.(2002). *Globalization, Anti-globalization*. London: Polity Press.
- Higgott, Richard. ed al.(2000). *Non-state Actors and Authority in the Global System*.

London: Routledge.

- Hirst, P. and Thompson, G.(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of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2004). *Who Are We? The Challenge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Simon & Schuster.(鈴木主税 譯.(2004). 『分斷されるアメリカ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危機』.集英社.)
- Hunter, Richard.(2002). *The World without Secret: Business, Crime and Privacy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Jenkins, Henry.(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Collide*. New York: University
- Johnson, Deborah G.(2003). "Reflections on Campaign Politics, the Internet and Ethics." D. M. Anderson and M. Cornfield. eds. *The Civic Web: Online Politics and Democratic Value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Juris, Jeffrey S.(2004). "Networked social movements: global movements for global justice."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orthampton, Mas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Kapstein, Ethan B.(2005). "Power, fairness, and the global economy." Barnett Michael and Raymond Duvall. ed.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ight, Julia, and Alexis Weedon.(2009). "Shifting Notions of Convergence."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Vol. 15. p.131.
- Lechner, F. and J. Boli.(2005). *World Culture: Origins and Consequences*. Malden, MA: Blackwell.(윤재석 역.(2006). 『문명의 혼성』. 서울: 부글북스)
- _____.(2003). *The Globalization Reader*. Malden, MA: Blackwell.
- Leonard, Mark.(2002). *Public Diplomacy*.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er.
- _____.(2005). *Going Public: Diplomacy for the Information Society*. Foreign

- Policy Center, UK.
- Levine, Peter.(2003). "Online Campaigning and the Public Interest." D. M. Anderson and M. Cornfield. eds. *The Civic Web: Online Politics and Democratic Value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Martin, D.(2007). *Rebuilding Brand America*. New York, NY: Amacom.
- Merton, Robert King.(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onge, Peter R. and Contractor, Noshir S.(2003). *Theories of Communication Network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2002). "Revolution, What Revolution? The Internet and US Elections, 1992~2000." E. C. Kamarck and J. S. Nye, Jr. eds. *Governance.com: Democracy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Nye, J. S. Jr.(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Press.
- Nye, J. S. Jr.(2008). *The Powers to Lea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apacharissi, Zizi.(2002). "The Virtual Sphere: The Internet as a Public Sphere," *New Media & Society*. Vol. 4, No. 1, pp.9~27.
- Polleta, Francesca, and James M. Japer.(2001). "Collective Identity and Social Move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 Rosenau, James N.(2003).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kopf, David.(1998). "Cyberpolitik: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1, Spring.
- Ruggie, John Gerald.(1998). *Constructing World Polity*. New York: Routledge.
- Ruppel, Marc.(2009). "Narrative Convergence, Cross-Sited Productions and the Archival Dilemma."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Vol. 15, No. 3, p.285.
- Sey, Araba and Manuel Castells.(2004). "From media politics to networked politics: the

- Internet and the political process.”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orthampton, Mas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Scott, John.(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second Edition*. London; Thousands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Snow, Nancy.(2009). “Rethinking Public Diplomacy.” Nancy Snow and Philip M. Taylor. ed.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New York: Routledge.
- Spanier, John and Eric M. Uslaner.(1989). American Foreign Policy Making and the Democratic Dilemma. 5th ed. *Pacific Grove*. Calif.: Brooks/Cole Publishing Co.
- Strogatz, Steven H.(2003). *Sync: the emerging science of spontaneous order*. New York: Theia.
- Suri, Jeremi.(2003). *Power and Protest: Global Revloution and the Rise of Deten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offler, Alvin.(1991). *Power 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Bentam Books.
- Watts, Duncan.(2003). *Six Degrees: the science of a connected age*. New York: Norton.
- 김상배.(2005). 『IT 시대의 디지털 외교』.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서울: 한울.
- _____.(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의 모색.” 하영선. 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지식 국가: 21세기 세계 정치의 전환』. 서울: 을유문화사
- 김용학 · 하재경.(2009). 네트워크 사회의 빛과 그늘. 서울: 박영사.
- 김창민 외 편역.(2005).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서울: 한울.
- 김태현 · 유석진 · 정진영 편(1995). 『외교와 정치』. 서울: 오름.
- 류춘열.(2005). “컨버전스와 사회변동” 유재천 외. 『디지털 컨버전스』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박길성.(2007). “세계화와 문화” 『세계정치』제28집 1호.
- _____.(2006).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 제7집 1호.

- 박종일 역.(2008). 『신공공외교: 국제관계와 소프트 파워』. 서울: 인간사랑.
- 신용국.(2003). 『인드라망의 세계』. 서울: 하늘북.
- 양난주.(2007). “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와 노인복지” 『사회복지연구』제35호.
- 오관석.(2007). 『정보사회와 미디어정치』. 서울: 인간사랑.
- 윤민재.(2007). “초국적 사회운동과 네트워크 시대.” 이재열 · 안정옥 · 송호근 편저.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와 쟁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성이 편.(2002). 『정보사회와 국제평화』. 서울: 오름.
- 이 근.(2007).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2006). 『디지털 컨버전스의 현황과 이슈』. 경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동연.(2006).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자본의 논리” 『문화과학』제47호.
- 임현진.(2003). “NGO/NPO 연구의 최근 동향: 초국적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NGO/한국 NPO 학회 춘계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 전재성.(2006). “21세기 미국의 변환외교” 하영선 · 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 조현석.(2008). “인터넷과 글로벌 사회운동의 세계정치.” 김상배 엮음. 『인터넷 권력
의 해부』.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정운.(2007).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제28집 1호.
- 평화포럼21 편.(2005).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21세기평
화재단 · 평화연구소.
- 하리노 겐이치로.(2007). “국제관계를 문화로 본다” 『세계정치』제28집 1호.
- 하영선 외 역.(2006).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 하영선 편.(2004).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서울: 풀빛.
- 하영선 · 김상배 편.(2007).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 하영선 · 남궁곤 편.(2008).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 한국정치학회.(2001). 『정보사회와 정치』. 서울: 오름.
- 알버도 라즈로 바라바시 青木薫 譯.(2002). 『新네트워크思考－世界

の仕組みを読み解く』. 日本放送出版會.

姜尙中・吉見俊哉.(2001). 『グローバル化の遠近法—新しい公共空間を求めて』.
岩波書店.

公文俊平.(2001). 『文明の進化と情報化—IT革命の世界史的意味』. NTT出版.
_____.(2004). 『情報社會序説—ラストモダンの時代を生きる』. NTT出版.
齋藤日出治・高増明.(2008). 『アジアのメディア文化と社會変容』. ナカニシ
ヤ 出版.

鈴木建二.(2007). 『デジタルは國民=國家を溶かす』. 日本評論社.

田中明彦.(2000). 『ワードポリティクス—グローバル化の中の日本の
外交』. 筑摩書房.

土屋大洋.(2008). 『ネットワークパワー: 情報時代の國際政治』. NTT出版.

前川啓治.(2005). 『グローカリゼーションの人類學: 國際文化・開發・移民』.
新曜社.

山本武彦 編.(2007). 『地域主義の國際比較—アジア太平洋・ヨーロッパ・西
半球を中心にして』. 早稻田大學出版部.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시리즈 안내

- 09-01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총괄보고서(황주성, KISDI)
- 09-0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의식과 행동(이종관, 성균관대)
- 09-03 영상콘텐츠의 일상화에 따른 인지방식의 변화(김성도, 고려대)
- 09-04 욕망과 매체변화의 상관관계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욕망구조(김상호, 대구대)
- 09-05 디지털 콘텐츠 표현양식과 다중정체성의 양상: 사례분석과 미래문화의 전망 (김연순, 성균관대)
- 09-06 디지털 컨버전스와 공간인식의 변화(황주성, KISDI)
- 09-07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정치제도와 시민사회 변화 연구(류석진, 서강대)
- 09-08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의제 변화와 정당의 역할(강원택, 숭실대)
- 09-09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치 거버넌스의 변화(윤성이, 경희대)
- 09-10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장우영, 대구가톨릭대)
- 09-1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홍원표, 한국외대)
- 09-1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와 정치참여 연구(이원태, KISDI)
- 09-13 컨버전스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 연구(조남재, 한양대)
- 09-14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정현수, 건국대)
- 09-15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감성적 공감대 기반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김연정, 호서대)
- 09-16 녹색성장 전략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홍성걸, 국민대)
- 09-17 디지털 융합과 콘텐츠 관련 산업의 공급사슬 변화 연구(한현수, 한양대)
- 09-18 디지털 컨버전스와 주요 멀티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손상영, KISDI)
- 09-19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김문조, 고려대)
- 09-20 미디어 융합의 전개과정과 사회문화적 파장(유승호, 강원대)

- 09-21 미디어 발전과 사회 갈등 구조의 변화(이명진, 고려대)
- 09-22 융합 사회의 인간, 인간관계: 온라인 자아 정체성과 사회화를 중심으로(민경배, 경희사이버대)
- 09-23 융합미디어를 활용한 공공-민간 상호작용 확대방안 연구(정국환, KISDI)
- 09-24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디어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이호규, 동국대)
- 09-25 가상성과 일상성의 컨버전스에 관한 연구(임종수, 세종대)
- 09-26 미디어 컨버전스와 감각의 확장: 감각확장 미디어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정동훈, 광운대)
- 09-27 컨버전스 시대와 매체로서의 개인(김관규, 동국대)
- 09-28 컨버전스 시대의 트랜스미디어 이용자 연구(이호영, KISDI)
- 09-29 미래예측방법론을 활용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 연구(최항섭, 국민대)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시리즈 09-1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2009년 9월 일 인쇄
2009년 9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38(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 인성문화
ISBN 978-89-8242-636-0 94320
ISBN 978-89-8242-655-1 (세트)
